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김두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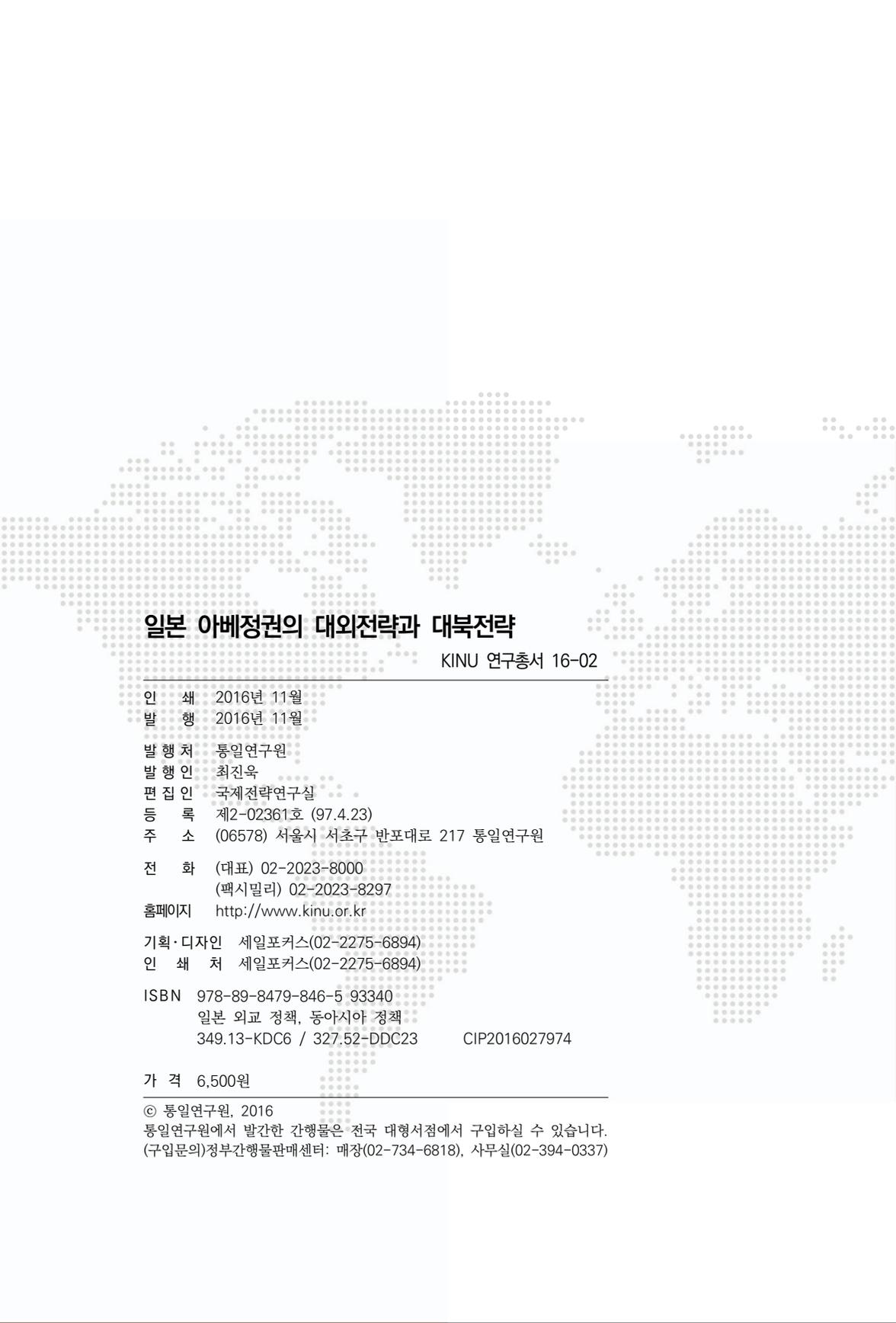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김두승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KINU 연구총서 16-02

인 쇄 2016년 11월
발 행 2016년 11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국제전략연구소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2023-8000
(팩시밀리) 02-2023-8297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02-2275-6894)
인 쇄 처 세일포커스(02-2275-6894)

ISBN 978-89-8479-846-5 93340
일본 외교 정책, 동아시아 정책
349.13-KDC6 / 327.52-DDC23 CIP2016027974

가 격 6,500원

© 통일연구원, 2016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요약	ix
I. 서론	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3
2. 연구 방법 및 구성	6
II. 아베정권의 대외전략	9
1. 아베정권의 출범과 일본의 국가전략	11
2. 대외전략 기조: ‘국가안보전략’	25
3. 아베정권의 대외전략 평가	30
III. 아베정권의 동북아시아 전략	33
1. 미일동맹 강화 전략	35
2. 대중전략: 대중국 견제 전략	47
3. ASEAN과의 안보협력: 대중국 포위 전략	51
4. 아베정권의 동북아 안보전략 전망	56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IV. 아베정권의 대한전략	65
1. 아베정권의 대한 인식 변화	67
2.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과 한일협력	70
3. ‘과거’ 문제와 한일 대북공조체제 구축의 한계	71
4. 북핵 문제와 한·미·일 협력의 재개	75
V. 아베정권의 대북전략	81
1. 아베정권의 대북전략 목표	83
2. 아베정권의 ‘대화와 압력’ 대북전략	88
3. 대북전략의 실제: 대북 압력의 지속	103
4. 아베정권의 대북전략 전망	109
VI. 결론	113
참고문헌	121
최근 발간자료 안내	129

표·그림목차

표 II-1 자민당 8대 파벌(2016년 8월 기준)	19
표 II-2 일본의 대ASEAN 외교 5원칙	22
표 II-3 일본의 국가안보 목표	28
표 III-1 미일 가이드라인 2015의 핵심내용	38
표 V-1 북일 스톡홀름 합의 내용	95
표 V-2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일본의 대북제재 조치 현황	99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그림 III-1 평화안전법제의 개요	43
그림 III-2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열점 지역	57

아베(安倍晋三) 수상은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와 ‘전략적 외교의 추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적극적인 대내외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아베정권이 내걸고 있는 일본의 국가전략 목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강한 일본’의 건설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안보 분야의 ‘강한 일본’ 건설을 위해 아베정권은 2013년 12월 17일 전후 최초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을 책정하고 발표한 바 있다. 아베정권이 ‘국가안보전략’을 책정한 배경에는 다양한 국내외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동 정책 결정의 핵심적인 배경은 국제안보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국의 정치 군사적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인 국력쇠퇴에 따라 국제적인 파워 밸런스가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과, 둘째, 북한의 핵위협에 더해 특히 센카쿠 열도 사태에서 보듯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적 행보에 대한 강한 경계심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베정권은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국가 존립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 즉 ‘국가안보전략’을 책정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베정권이 제시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은 1) 독자적인 방위력 증강, 2) 미일동맹, 3) 한국, 호주 등 우호국과의 안보협력관계 구축(ASEAN 포함)의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전략을 통해 일본의 국익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아베정권의 ‘대외적인’ 안보전략 기조는 미일동맹과 한국, 호주, ASEAN 등과의 안보협력관계 구축이라는 대아시아 외교로 이루어져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 그동안 아베정권은 대아시아 ‘전략외교의

전개'라는 슬로건하에 한국을 비롯한 우호국 및 동북아 지역 국가에 대한 전략을 전개해 왔다. 아베정권의 대ASEAN 전략을 비롯해 대한반도, 대북전략이 '전략 외교'의 관점에 입각해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아베정권은 2016년 1월 6일에 있었던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7일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각의 결정을 통해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발동하면서도 대북정책을 '대화과 압력', '행동 대 행동'이라는 원칙하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였다. 이는 일본인 납치 문제와 같은 일본의 국익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는 형태로 '전략외교'의 관점에 입각해 대북정책을 전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즉, 설령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을 경우에도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아베정권의 미일동맹 강화 전략과 관련하여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동 전략이 일본의 중장기 안보전략 관점에서 볼 때 '보통국가 일본'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과도기적 '프로세스'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아베정권은 일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중시하면서도, 미국의 상대적인 국력 약화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안보환경에 대처 가능한 일본의 독자적인 방위력 증강 필요성 또한 중시해 왔다. 아베정권은 대중국 견제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유지 목표하에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 전략에 대해 일본의 역할 분담을 확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결정, 미일 가이드라인 2015 책정과 평화안전법제의 정비, 방위예산 증액 등 적극적인 방위력 증강 정책은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된 것이다. 아베정권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방위력 증강)이 상대적인 국력

쇠퇴가 논의되고 있는 미국을 지원하고, 또한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대등한 미일동맹 관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이며, 이러한 관계 형성은 궁극적으로는 안보정책에 관한 주권국가 일본의 국가이익을 독자적으로 판단하는데 중요한 상황적 조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베정권의 미일동맹 강화 전략은 ‘보통국가 일본’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략적 판단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베정권의 대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는 ASEAN, 호주,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과 같은 범주에 속해 있다. 한국은 아베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아시아 전략외교의 전개 대상국 중 하나일 수 있다. 아베정권의 대한국 전략은 역사 문제를 관리하고,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나아가 동·남중국해 등의 지역에서 표출되고 있는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적 행보를 견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베정권이 역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안보협력관계 구축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대한국 전략의 기저에는 대중국 포위망 구축이라는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아베정권의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관계 구축 전략 역시 이러한 대중국 견제라는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아베정권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이나 북한이 핵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갖기 전에는 대북전략을 완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베정권은 양 현안에 있어 한국,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하면서 대북 제재 등 ‘압력’ 전략에 동참하겠지만, 대중국 및 한국 관계 그리고 미일 동맹의 변화 양상에 따라서는 과거

경험이 있듯이 독자적인 대북 대화 및 유화 정책에 중점을 둔 전략을 전개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아베정권의 대외전략 및 대한, 대북전략을 앞에 두고 한국의 대일전략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아베정권의 대외전략이 ‘군사대국화’를 통한 군국주의의 팽창이라는 과거 지향의 관점을 버려야 한다. 둘째, 한국은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전제로 대일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일동맹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한 전략 외교 전개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 넷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 및 대한, 대북전략에서 언제나 ‘중국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다섯째, 한일 관계에서 가치관과 체제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아베정권의 장기집권에 대비한 중기적인 대일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일곱째, 아베 이후, 즉 ‘포스트 아베’ 일본의 대외전략 및 대한, 대북전략을 분석하고 예측해야 한다.

향후 일본에서 보통국가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한다면 일본이 과거 통상국가에서 보통국가로, 그리고 보통국가에서 권력국가로 국가노선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상징하고, 한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포스트 아베로 불리는 이시바 전 간사장과 기시다 외상 두 사람의 정치적 이념 및 대외 구상 등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이들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에 대한 생각을 하루빨리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아베정권, 보통국가, 대화와 압력, 국가안보전략

Abe's Foreign and North Korea Policies

Lee, Kitae and Kim, Doo-seung

Under the slogan of 'escaping the post-war regime' and 'conducting strategic diplomacy,' Prime Minister Shinzo Abe pushes ahead with proactive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The Abe administration revises and improves a number of institutions and mechanisms including Japan's Pacifist Constitution which has served as the foundation for its restricted security policy to make Japan a 'normal country.' Its external security policy including the strengthening of both the Japan-US alliance and the defense force is becoming assertive; especially, building a strong Japan-US alliance and conducting the strategic diplomacy towards Asia aimed at establishing cooperative security relations with South Korea, Australia and ASEAN in response to China's rise are the two principal axes of the administr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strategy.

South Korea and Japan have been in conflict originating from the gap in historical perception including the 'comfort women' issue. However, the administration's emphasis on South Korea, and on threats from China and North Korea leads it to make efforts to resum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The administration pursues a policy of dialogue and pressure towards North Korea which is shown when dealing with the issues of kidnapped Japanese citizens an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Keywords: Shinzo Abe, Normal Country, Dialogue and Pressure, National Security Strategy

I.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012년 12월에 출범한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대한 평가는 제1차 아베정권(2006년 8월~2007년 9월)의 경험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당시 제1차 아베정권은 겨우 1년 남짓한 기간의 정권이었고 정권 자체도 뚜렷한 성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¹⁾ 따라서 제1차 아베정권의 경험은 참고는 될 수 있지만 매우 한정적이라는 한계도 존재한다. 또한 아베의 전임자였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정권에 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수준의 학문적인 성과가 있지만,²⁾ 아베정권은 단기간이었기 때문에 선행연구라고 할 만한 것도 매우 적다.

현재 제2차 아베정권은 제1차 정권이 단명 정권으로 실패했던 것과 다르게 3년 반이 넘도록 정권이 유지되면서 전후 일본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정권 중의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³⁾ 기존에 한국 내에서는 아베정권의 대외전략을 가늠하는데 있어 주로 아베 가문의 특징이 아베 개인의 사상과 신념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1) 우에스기 다카시(上杉隆)는 제1차 아베정권의 실패를 아베가 주도했던 관저 정치를 분석하면서 찾고 있으며, 결국 아마추어적인 측근 정치로 붕괴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에스기 다카시 지음, 남윤호·이승녕 옮김, 『아마추어 정부의 몰락』 (서울: 중앙북스, 2008), p. 6.

2) 한의석, “탈자민당 정치와 변화의 리더십: 고이즈미 리더십 연구,” 손열 편, 『일본 부활의 리더십: 전후 일본의 위기와 재건축』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3), pp. 193~226; 内山融, 『小泉政権: 「パトスの首相」は何を変えたのか』 (東京: 中央公論新社, 2007), pp. 111~167.

3) 제1차 아베정권의 실패와 달리 제2차 아베정권의 관저 주도 정치가 비교적 잘 운영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다음의 책 참조. 田崎史郎, 『安倍官邸の正体』 (東京: 講談社, 2014), pp. 166~191. 그리고 아베 수상은 과거 ‘아름다운 국가로’라는 저서를 통해 자신의 대외전략 구상 등을 밝혔는데 2013년 재집권과 함께 ‘새로운 국가로’라는 내용을 보완한 저서를 발간했다. 安倍晋三, 『新しい国へ: 美しい国へ 完全版』 (東京: 文藝春秋, 2013), pp. 113~164.

연구가 존재한다.⁴⁾ 하지만 아베 수상이 정권을 출범한 이후 글로벌 및 지역적, 한반도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아베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⁵⁾ 자민당 총재가 총리대신에 취임하는 의원내각제 국가 일본에서 현재 자민당 총재 임기를 재선으로 제한한 규정을 3선까지 가능하게 하려는 아베정권의 움직임을 고려했을 때, 최대 5년까지 아베정권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아베정권의 글로벌 및 지역적 차원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차원의 대북(대한) 전략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의 대일전략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베 수상은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피’와 ‘전략적 외교의 추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적극적인 대내외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아베정권이 내걸고 있는 일본의 국가전략 목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강한 일본’의 건설로 요약할 수 있다. 동 정책은 경제 분야에서는 아베노믹스를 통해, 안보 분야에서는 전후 최초로 책정·발표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에서 보듯 ‘평화수혜자’로서의 전후 일본을 탈피하여 적극적 평화주의에 입각한 ‘평화창출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 ‘강한 일본’을 건설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안보 분야의 ‘강한 일본’ 건설을 위해 아베정권은 2013년 12월 17일 전후 최초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을 책정하고 발표한 바 있다. 아베정권이 ‘국가안보전략’을 책정한 배경에는 다양한 국내외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동 정책 결정의 핵심적인 배경은 국제안보환경

4) 임은정, “아베 유신과 한반도: 제2기 아베 정권의 대전략과 대(對)한반도 정책,”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일본 파워엘리트의 대한정책』 (서울: 선인, 2016), pp. 165~200.

5) 일부 일본연구자들이 제2차 아베정권 출범 이후 아베정권의 대외전략을 연구한 성과물은 존재한다. 박철희 엮음, 『동아시아 세력전야와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 (서울: 동아아시아재단, 2014) 참조.

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국의 정치 군사적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인 국력쇠퇴에 따른 국제적인 파워 밸런스가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과, 둘째, 북한의 핵위협에 더해 특히 센카쿠 열도 사태에서 보듯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적 행보에 대한 강한 경계심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베정권은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국가 존립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 즉 ‘국가안보전략’을 책정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정권이 제시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은, 1) 독자적인 방위력 증강, 2) 미일동맹, 3) 한국, 호주 등 우호국과의 안보협력관계 구축(ASEAN 포함)의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전략을 통해 일본의 국익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아베정권의 ‘대외적인’ 안보전략 기조는 미일동맹과 한국, 호주, ASEAN 등과의 안보협력관계 구축이라는 대아시아 외교로 이루어져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 그동안 아베정권은 대아시아 ‘전략외교의 전개’라는 슬로건하에 한국을 비롯한 우호국 및 동북아 지역 국가에 대한 정책을 전개해 왔다. 아베정권의 대ASEAN 정책을 비롯해 대한반도, 대북정책이 ‘전략 외교’의 관점에 입각해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아베정권은 2016년 1월 6일에 있었던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7일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각의 결정을 통해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발동하면서도 대북정책을 ‘대화과 압력’, ‘행동 대 행동’이라는 원칙하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였다. 이는 일본인 납치 문제와 같은 일본의 국익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는 형태로 ‘전략 외교’의 관점에 입각해 대북정책을 전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즉, 설령 북핵 문제 해결에

I
II
III
IV
V
VI

진전이 없을 경우에도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2014년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 수상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경시하지 않고 2016년 5월에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일러 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사실도 ‘전략 외교’라는 아베정권의 대외전략 기조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아베정권이 ‘강한 일본’의 건설이라는 정권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제, 안보 분야의 대외전략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안보 분야의 대외전략, 즉 미일 동맹과 대아시아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 성장전략으로서의 대외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안보적인 함의 또는 성격을 갖는 분야에 한해서 필요시 다루기로 한다. 또한 아베정권의 대한정책과 대북정책이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적 요인과 중국 견제라는 대외적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아베정권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을 그동안 아베정권이 발표한 정부 문서 분석을 통해 파악하려고 한다. 특히 2013년 12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은 일본이 구체적인 국가 차원의 안보전략을 대외에 공표한 중요한 문서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은 국가안보전략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보다 세부적인 지역적, 한반도 차원의 대외전략은 정부 문서와 각종 2차 문헌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II장에서 먼저 일본의 4가지 국가노선과 자민당 파벌 정치 속에서 아베정권이 차지하는 위치를 알아보고, 아베정권의 대외전략 기조인 ‘국가안보전략’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아베정권이 전후 최초로 ‘국가안보전략’을 책정한 배경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보전략을 통해 일본의 국가전략 목표를 실현하고자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분석한다. III장에서는 아베정권의 동북아시아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일본의 안보전략에서 핵심 축을 이루는 미일동맹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아베정권이 미일동맹 강화 차원에서 추진해온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등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분석한다. 다음으로 아베정권이 대아시아 외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국, 대ASEAN 전략에 대해 고찰한다. IV장에서는 아베정권의 대한전략을 살펴본다. 아베정권은 한국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 관계에 있었지만, 중국과 북한의 위협과 한국에 대한 안보중시정책을 강조하면서 한·미·일 협력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V장에서는 아베정권의 대북전략이 ‘대화와 압력’이라는 기조하에 전개되고 있으며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북핵 문제’에서 이러한 양면 전략이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한다. 특히 아베정권의 대북전략이 대중 및 대한 관계와 관련해서 동아시아에서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외교 이니셔티브를 얻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아베정권의 안보 분야의 종합적인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에 대해 평가하고,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의 방향에 대해 전망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한국의 안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I
II
III
IV
V
VI

II. 아베정권의 대외전략



1. 아베정권의 출범과 일본의 국가전략

가. 일본의 국가노선과 자민당 파벌 정치

(1) 일본의 국가노선과 보통국가

아베정권의 등장과 함께 일본의 국가노선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이 있다. 실제로 아베 수상은 미일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추구하는 대외관계 강화와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피'라는 보수이념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베정권은 대외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하면서 대외전략을 형성하고 강화시키려고 한다.

일본의 국가노선에 대해서는 이명찬의 4가지 노선으로 설명 가능하다. 이명찬은 일본의 국가노선을 '(미일)동맹과 자주', '(평화헌법)개헌과 호헌'이라는 동맹과 군사력의 역할에 따라 '평화국가', '통상국가', '보통국가', '권력국가' 등 4가지 노선으로 구분하고 있다.⁶⁾ 전후 일본은 평화헌법을 지키면서(호헌) 미일 동맹을 유지한 '통상국가' 노선을 고수했지만, 현재는 평화헌법의 개정(개헌)을 추진하면서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보통국가' 노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⁷⁾ 한편 한국 내에서는 향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및 헌법개정을 통한 '보통국가' 노선에 머무르지 않고 핵무장을 포함하는 일본의 자주노선, 즉 '권력국가'의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분석이다.

⁶⁾ 이명찬,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에 나타난 '네 가지 노선':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의 이해를 위한 분석틀," 『국제·지역연구』, 제16권 1호 (2007), pp. 75~116.

⁷⁾ 이기태, "일본의 미일동맹 강화 전략," 박철희 엮음,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일본 대외 전략의 변화』 (서울: 동아시아재단, 2014), p. 141.

I
II
III
IV
V
VI

한편 전후 일본은 1957년 외교청서에 ‘일본 외교의 기본방침’을 표명하면서 ‘UN 중심’, ‘서측 일원(미일동맹)’, ‘아시아 외교’를 일본 외교의 기조로 삼아왔고,⁸⁾ 따라서 미일동맹과 아시아 외교는 일본 외교의 특징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였다. 아베정권 이전 일본 외교의 특징은 ‘전방위 외교’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은 평화헌법의 제약 아래 ‘UN 중심’ 외교를 통해 제한적이거나 국제공헌에 노력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냉전 및 탈냉전 기간 동안 미일동맹 유지를 통해 국가 안보를 모색해왔다. 그러면서도 냉전 시기에는 중국 및 소련, 북한 등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과 국교 수립 혹은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는 등 ‘대아시아 외교’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처럼 일본은 ‘전방위 외교’에 기반한 ‘실용주의’ 대외전략을 전개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06년 제1차 아베정권 등장 이후 아베 수상은 ‘가치관 외교’를 중시하면서 최근에는 ‘자유민주주의’, ‘법의 지배’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국가들과 연대를 모색하는 대외전략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현재 일본의 대외전략이 아베정권이 들어서면서 전후 오랫동안 이어져왔던 ‘전방위 외교’에서 ‘가치관 외교’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2) 자민당 파벌 정치와 아베 신조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90년대 비자민연립정권 시기와 2009~2012년 민주당 정권 시기를 제외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을 지배해 왔다. 오랜 기간 동안 자민당 1당 장기 집권이 이루어졌지만, 자민당 내 다양한 정책을 가진 파벌 간의 경쟁은 실질적인 정권

⁸⁾ 外務省, “わか^가外交^の近況(1957),” <<http://www.mofa.go.jp/mofaj/gaiko/bluebook/1957/s32-contents.htm>>. (검색일: 2016.9.28.).

교체의 효과를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록 2000년대 고이즈미 수상 등장 이후 계속해서 자민당 내 파벌 정치가 악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파벌 정치의 영향력은 남아 있으며 아베정권에서도 포스트 아베를 둘러싼 각 파벌의 움직임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자민당의 파벌 정치 계보 속에서 아베 신조라는 정치가가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아베 수상의 부친은 자민당의 실력자였지만 수상의 자리에는 오르지 못했던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郎), 외할아버지는 ‘쇼와(昭和)의 요괴(妖怪)’라고 불렸던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이다. 아베의 친할아버지인 아베 간(安倍寛)은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했던 인물이었지만, 아베는 친할아버지 보다는 외조부인 기시를 정치가의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다.

기시는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의 ‘경무장·대미협조’ 노선에 비판적이었고, 대미 ‘자주’ 입장을 강조했다. 그런데 기시가 대미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즉, 기시가 정치적 생명을 걸고 미국이 요구하는 미일안보조약 개정을 완수했다는 점에서 ‘친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평가가 존재하는가 하면, ‘대미자주’의 자세가 미국에게 경계감을 주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대미 대응에서 뿐만 아니라 요시다 외교와 구별되는 기시 외교의 특징은 당시 반공주의에 기반을 둔 ‘아시아주의’ 외교를 지향했다는 점이다.

안보개정을 둘러싼 반안보투쟁으로 일본 국내의 정치적 혼란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시가 책임을 지고 퇴진한 후, 자민당 내 기시파는 분열되었지만 대다수는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가 이끄는 세이와카이(清和會)에 합류했다. 당시 후쿠다는 기시의 친동생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정권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후쿠다와 함께 사토 정권을 지탱한 또 하나의 라이벌로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가 있었고, 이 둘은 사토의 후계 자리를 놓고

격렬하게 경쟁했다. 다나카파는 중일 국교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해 중일 관계를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내걸었고, 상대적으로 친대만파가 많은 후쿠다파는 대만을 희생시켜 가면서 중일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에 반대가 많았다. 또한 후쿠다파에는 장제스, 박정희로 대표되는 아시아의 반공주의 지도자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친한파’로 분류되기도 했다. 단, 후쿠다는 기시와 달리 정치적 성향이 우익적이지는 않았고 오히려 자유주의적(liberal)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후쿠다의 자유주의적 성향은 1970년대 후반 수상이 되었을 때 ‘전방위 외교’의 기치를 내걸고 다각적인 외교를 추구하면서, 동남아시아 방문 시에는 ‘후쿠다 독트린’ 발표를 통해 전전(戰前) 시기 동남아시아 침략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동남아시아 외교의 이념을 내세운 데서 강하게 나타났다. 후쿠다의 후계자였던 아베 신타로도 비슷했다. 1980년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정권에서 외상을 역임했던 아베 신타로는 후쿠다의 자유주의적 측면을 이은 외교적 이념을 나타냈다.

2000년대 들어 세이와카이는 모리 요시로(森喜朗), 고이즈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등의 수상을 연이어 배출하며 주류 파벌로 나타나게 된다. 이들의 외교가 어떤지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데올로기 색채가 강한 외교를 지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북전략에 대한 고이즈미 외교는 다른 정권에서는 불가능했다는 점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이즈미가 세이와카이라는 보수 이데올로기가 강한 파벌 지도자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 외교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현재의 아베 수상, 그리고 아베 수상이 소속된 세이와카이가 보수 이데올로기 계보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평가할 만한 요소가 있다. 그 배경에는 냉전 이후 중국의 부상과 함께 동아시아 파워 밸런스(power balance)의 변화라는 국제정치의 구조적 변용에 의해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변했다는 점이 존재한다. 여기에 한국이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화되었다는 사실도 있다. 이에 따라 자민당 내 우파 정치인들이 과거에 공유했던 아시아주의적 요소가 매우 약해졌다. 즉, 그들 대부분이 반공 기반의 친대만파였기 때문에 대중 관계에서는 여전히 강경파로 존재했고 대북 관계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지만, 대한 관계에서는 냉전 시기만큼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

여기에 냉전 이후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를 한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일본 국내의 반작용이 생기고 역사 인식을 둘러싼 문제가 국가 간 대립, 혹은 일본 국내의 대립으로 정치화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기시 노선 중에서 미일 관계 강화라는 측면만 강조되었고, 아시아주의라는 측면은 실질적으로 포기되었다.

아베 수상은 1993년 아버지의 후계자로 중의원 선거에 당선되면서 자민당 내의 민족주의를 의식하고 대외적인 강경 노선을 주장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즉, 헌법 개정을 정면에 내걸고, 미일동맹 강화, 납치 및 체제 문제에 대한 대북 강경 자세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정치인 아베가 각광을 받은 이유는 고이즈미 정권의 관방장관으로 입각해서 고이즈미 방북에 동행한 후,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고, 북한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아베는 자민당의 주류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민당이 구축해온 ‘전후 체제’로부터 ‘탈각’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등 안보정책의 전통적인 제약을 없애고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안보정책의 수정주의’와 함께 기존에 존재하는 제약에 기반을 둔 비굴한 ‘자학적인’ 역사

I
II
III
IV
V
VI

관을 타파하여 일본국민이 일본 역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역사적·이념적 수정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제1차 아베정권 시기에 아베 수상은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피’를 내세우며 교육정책 등에서 매우 우파색이 강한 정책을 내세웠지만, 결국 전임인 고이즈미와 달리 중일 관계를 고려하여 8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았고, 고노(河野) 담화 및 무라야마(村山) 담화의 개정에도 착수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베 수상은 외교에서 현실주의 노선을 지향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현재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아베 수상은 평소에 주창해 왔던 ‘전후 체제의 종결’이라는 관점에서 북일 간 수교를 이루고 싶지만, 여러 현실적인 요소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일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반공을 기반으로 하는 ‘세이와카이’ 소속의 아베 수상 및 그 주변 인사들에 의한 대북관계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다.⁹⁾

자민당 내에서 후쿠다파의 라이벌이었던 다나카파의 후계자였던 노나가 히로무(野中広務), 가네마루 신(金丸信)은 북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다. 이들은 1990년대 이후 북한이 자행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북한 위협 및 범죄행위를 축소시키면서까지 국교 회복을 서둘렀다. 북한에 대한 상당한 액수의 원조를 통해 냉전의 최종적 종결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것이 과거 일본이 침략했던 북한에 대한 보상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인 납치 문제보다 동아시아 평화 실현이라는 대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¹⁰⁾

⁹⁾ 이기태, “대일본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 김진하 외,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79.

¹⁰⁾ 위의 글, pp. 79~80.

(3) 현재의 자민당 파벌 정치와 일본의 대외 및 대북전략

2016년 8월을 기준으로 자민당은 8대 파벌로 분류되고 있다. 이 중에서 향후 자민당 내에서 현직 총리 및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를 중심으로 주목받는 파벌은 아베 수상이 소속된 자민당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細田派)와 아베 수상의 당내 최대 라이벌로 불리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가 이끄는 이시바파(石破派), 그리고 제2차 아베 내각에서 외무상을 맡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가 이끄는 기시다파(岸田派)라고 할 수 있다.

호소다파는 앞서 언급한 ‘세이와카이’를 말하며 냉전 시기에는 ‘보수 방류’라 불리는 반공을 앞세운 ‘보수우파’ 색채가 강한 파벌이다. 과거 부터 이념적으로 친대만 성향과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 의식을 갖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냉전 시기에는 반공이라는 이념 아래 친한파로 분류되었으나, 냉전 이후에는 일본 사회의 보수우경화를 주도하면서 역사 문제 등에서 한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하지만 안보적 측면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에 긍정적이면서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기시다파는 ‘코치카이(宏池会)’라고도 불리우며 정책면에서 역사적으로 명확한 일관성이 있지는 않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중도파에 속하며 특히 대외 정책에서는 미일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약간은 비둘기파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거 ‘보수본류’라고 불리우며 대중국 관계의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며 대북정책에서도 세이와카이의 강경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시바파는 그동안 파벌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무파벌을 지향했던 아베의 최대 정치라이벌 이시바가 2015년 9월 28일에 스스로가 파벌회장을 역임하고 스이게쓰카이(水月會)라 칭하며 자신의 파벌을

I
II
III
IV
V
VI

만든 것이다. 이는 아베 이후 차기 수상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지만, 파벌 제도 개혁을 주장했던 이시바의 독자 파벌 형성은 ‘언행불일치’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시바파는 이시바 개인의 정책 지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시바 개인의 정책적 성향을 살펴볼 때, 대외 정책에서는 중국의 부상과 북한 위협을 경계하면서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한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주장하는 등 아베 수상과 일치하는 점이 많지만,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 등 역사 인식 측면에서 전향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중국 및 한국과 관계 개선,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¹¹⁾

이외에도 자민당 내에는 자유주의적 성향의 파벌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앞서 언급한 기시다파,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일한의의원 연맹 회장이 파벌영수인 누카가파(額賀派)와 같은 구다나카파 세력과 보수좌파로 분류할 수 있는 니카이파(二階派), 산토파(山東派)가 존재한다. 이들 자유주의적 성향의 파벌들은 한국과 역사 문제 등에서 인식을 공유할 수 있고, 북한 문제에 온건 성향을 보이고 있다.

사실 아베정권이 매우 보수적이고 우경화된 내각으로 알려지고 있고, 아베 측근 중에서도 보수우경화 경향이 강한 이나다 토모미(稲田朋美) 방위상과 같은 사람들이 내각에 전면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아베 수상은 기시다 외상,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전 간사장과 같이 대외전략 구상에서 어느 정도 강경 성향을 견제할 수 있는 온건파들을 내각과 당에 적절하게 배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아베 수상은 이념적으로는 자신의 이데올로기 및 신념

¹¹⁾ 이기태는 이시바 시게루에 대해 보수우파적 안보관과 보수리버럴적 역사관이 혼재된 대한국인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기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의 대한국 인식: 보수우파적 안보관과 보수리버럴적 역사관의 혼재,”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일본 파워엘리트의 대한정책』 (서울: 선인, 2016), p. 202.

을 같이 하는 측근들을 자신의 내각에 배치하면서 보통국가를 지향하면서도 대외전략과 대북전략이 항상 강경일변도로 흐르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온건파 세력을 함께 공존시키고 있다.

표 II-1 자민당 8대 파벌(2016년 8월 기준)

파벌	영수	소속의원수 (중/참)	특징	대표적 파벌 계보
호소다파 (細田派)	호소다 히로유키 (細田博之)	97(63/34)	매파(보수방류), 아베 수상 파벌	기시 노부스케
누카가파 (額賀派)	누카가 후쿠시로 (額賀福志郎)	49(31/18)		사토 에이사쿠
기시다파 (岸田派)	기시다 후미오 (岸田文雄)	41(28/13)	정통 보수분류	이케다 하야토
아소파 (麻生派)	아소 다로 (麻生太郎)	39(29/10)		고노 요헤이
니카이파 (二階派)	니카이 도시히로 (二階俊博)	37(29/8)	보수좌파	
이시바파 (石破派)	이시바 시게루 (石破茂)	21(19/2)	이시바의 수상 취임을 목적	
이시하라파 (石原派)	이시하라 노부테루 (石原伸晃)	15(14/1)		야마사키 다쿠
산토파 (山東派)	산토 아키코 (山東昭子)	12(8/4)	보수좌파	고무라 마사아키

출처: 위키백과사전 '자유민주당의 파벌(自由民主党の派閥)' <<https://ja.wikipedia.org/wiki/%E8%87%AA%E7%94%B1%E6%B0%91%E4%B8%BB%E5%85%9A%E3%81%AE%E6%B4%BE%E9%96%A5>>. (검색일: 2016.9.28.)을 필자가 재구성.

나. 대외전략 기초: 미일동맹 강화와 대아시아 전략외교의 전개

2012년 12월 16일 실시된 제46회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중의원 총의석 480석 중 57석을 획득한 데 반해, 자민당은 294석을 획득하여 안정

- I
- II
- III
- IV
- V
- VI

적인 국정운영에 필요한 과반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3년여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하였다.¹²⁾ 중의원 선거 당시 아베 자민당이 내건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적인 정책 공약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¹³⁾

첫째, 미일동맹 강화와 함께 한국, 중국,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자유·공정·법의 지배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둔 전략적 외교를 전개한다는 것이다. 선거 당시 아베 자민당은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하여 일본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주장하는 외교’를 전개한다는 정책 방침을 제시하였다.¹⁴⁾ 미일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을 추진하고, 주일미군의 재편 및 미일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전략적인 관점에 입각해 중국, 한국 등 대아시아 외교를 전개한다는 것이다.

둘째, 헌법 개정, 국가안전보장기본법 제정 등 일본의 새로운 안보체제 구축 방침을 들 수 있다. 특히 자민당은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개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동 정책 방침은 2012년 4월 자민당이 공표한 헌법 개정 초안(‘국방군’ 조항 제9조)을 토대로 제시된 것이었다.¹⁵⁾

셋째, 영토 및 영해 문제에 대한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방침을 지적할 수 있다. 중의원 선거 당시 아베 자민당은 ‘방위예산 증액, 주권

12) “自民党大勝294・民主57・維新54…議席確定,” 『読売新聞』, 2012.12.17.

13) 自由民主党, “自民党重点政策2012,” <https://jimin.ncss.nifty.com/pdf/seisaku_ichiban24.pdf>. (검색일: 2016.9.28.); 安倍晋三, “新しい国へ,” 『文芸春秋』, 2013년 1月号, pp. 124~133; 石破茂, “安倍さんと日本を建て直す,” 『文芸春秋』, 2012년 11月号, pp. 182~188 참조.

14) 首相官邸, “安部内閣総理大臣就任記者会見(2012.12.26.),” <http://www.kantei.go.jp/jp/96_abe/statement/2012/1226kaiken.html>. (검색일: 2016.9.28.).

15) 自由民主党, “日本国憲法改正草案,” <http://www.jimin.jp/policy/policy_topics/pdf/seisaku-109.pdf>. (검색일: 2016.9.28.).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 제9조는 “평화주의를 계승하는 동시에 자위권을 명기하고, 국방군을 보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및 영토·영해 수호, 영해 경비 및 해상보안청 기능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동 방침하에 아베정권은 출범 직후인 2013년 1월 28일, 2013년도 방위예산을 2012년도 대비 351억 엔 증액하는 정부방침을 각의 결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¹⁶⁾ 이러한 정책 방침은 당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던 센카쿠 열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 강화, 즉 영토 및 영해 정책에 대한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처럼 아베정권은 중의원 선거 당시 미일동맹 강화를 비롯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방위예산 증액 그리고 궁극적으로 헌법 개정 등 ‘보통국가’ 일본을 실현하기 위한 안보정책의 전개 방침을 표명하였다. 정권 출범 후 아베정권은 이들 안보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대외적인 안보전략에 대해서도 ‘긴밀한 미일동맹의 복원’과 ‘아시아 외교의 전개’라는 일본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아베정권의 이러한 대외적인 안보전략 기조는 정권 출범 직후 베트남 등의 ASEAN 국가 방문과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우선 아베 수상은 2013년 1월 16일부터 3일간 동남아 3국(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을 공식 방문하고, 이 과정에서 ‘ASEAN 각국과의 경제연대 강화’, ‘日-ASEAN 간의 파트너십 강화’ 기조하에 다음과 같은 일본의 대ASEAN 외교 5원칙을 발표하였다.¹⁷⁾

16) “防衛予算増額・領土を守る体制拡充の一步に,” 『読売新聞』, 2013.2.2.; “일본 재무장 시작됐다,” 『서울신문』, 2013.1.29. 이와 함께 자위대의 정원도 8년 만에 육상 자위대 94명, 해상자위대 96명, 항공자위대 97명의 합계 287명 증원하기로 결정하고 있다.

17) 首相官邸, “開かれた, 海の恵み——日本外交の新たな5原則(2013.1.18.),” <http://www.kantei.go.jp/jp/96_abe/statement/2013/20130118speech.html>. (검색일: 2016.9.28.).

I
II
III
IV
V
VI

표 II-2 >> 일본의 대ASEAN 외교 5원칙

〈일본의 대ASEAN 외교 5원칙〉

-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의 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 경주
- 힘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해양 공공재의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 추진(이를 위한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 환영)
- 각종 경제연계 네트워크를 활용한 무역/투자 촉진을 통해 일본경제 재생과 ASEAN 번영 도모
-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전통에 대한 공동 보호/육성 추진
- 젊은 세대의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이해 촉진

출처: 首相官邸, “開かれた, 海の恵み——日本外交の新たな5原則(2013.1.18.),” <http://www.kantei.go.jp/jp/96_abe/statement/2013/20130118speech.html>. (검색일: 2016.9.28.)에 의거하여 필자 작성.

한편, 아베 수상은 2013년 2월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동맹 강화는 일본 외교의 핵심축’이라는 견해를 밝혔다.¹⁸⁾ 이러한 인식하에 아베정권은 미일동맹 강화를 위해 일본의 역할 분담을 확대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의 대미협력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상과 같이 아베정권의 대외적인 안보전략은 미일동맹 강화와 한국, 호주, ASEAN 등 아시아국가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동시에, 특히 대중국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에 입각해 구축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교섭에의 참가 결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외교적 결단으로

¹⁸⁾ 外務省, “日米首脳会談概要(2013.2.22.),” <http://www.mofa.go.jp/mofaj/kaidan/s_abe2/vit_1302/us.html>. (검색일: 2016.9.28.)

해석 가능하다.

다. 국가전략: ‘강한 일본’ 건설

아베정권은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피’와 ‘전략 외교의 추진’이라는 기치 아래 적극적인 대내외 정책을 전개해 왔다. 아베정권이 내걸고 있는 일본의 국가전략 목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강한 일본’의 건설로 요약할 수 있다. 동 정책은 경제 분야에서는 아베노믹스를 통해, 안보 분야에서는 후술하는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에서 보듯, ‘평화수혜자’로서의 전후 일본을 탈피하여 적극적 평화주의에 입각한 ‘평화창출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 ‘강한 일본’을 건설하겠다는 전략이다.

‘강한 일본’ 건설 전략에 대해 아베 수상이 최초로 언급한 것은 신정권 출범 직후인 2013년 2월에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과의 미일정상회담에서였다. 회담에서 아베 수상은 “강한 일본은 미국의 이익이 되며, 강한 미국은 일본의 이익이 된다”고 전제한 후, 이를 위해 일본의 안보 분야에서의 역할 확대를 전제로 한 방위력 증강과 경제재건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피력하였다.¹⁹⁾ 199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일본의 경기침체 상황에서 탈피하여 경제대국 위상을 회복하고, 안보군사 분야의 역할을 확대하여 경제·안보 분야의 ‘강한 일본’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일본의 경제 재건을 위해 아베정권은 이른바 ‘아베노믹스’로 명명된 금융완화, 재정지출 확대, 성장정책의 3대 경제정책을 발표하였다. 아베정권의 동 정책 발표에 대해, 당시 일본 국내에서는 금융완화 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여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부터

¹⁹⁾ *Ibid.*

I
II
III
IV
V
VI

터 탈피할 수는 있을지라도 일본 경제의 근본적인 재생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재정 건전성’의 실현 여부에 달려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일본 국내 여론을 반영하여, 아베정권은 일본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외적인 성장전략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결정과 ASEAN과의 경제협력관계 강화정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후자의 ASEAN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아베 수상은 2012년 12월 취임 이후 11개월 만에 ASEAN 10개국을 모두 방문하여, 앞서 언급한 일본의 대ASEAN 5원칙을 발표하였다.

한편, 안보 분야의 ‘강한 일본’ 실현을 위해 아베정권은 전후 일본의 억제적인 안보정책의 기반이 되어온 헌법 개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동시에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을 포함한 미일동맹 강화 방침 표명, 2003년 이후 11년 만의 방위예산 증액 및 새로운 방위계획대강 책정 방침 표명,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문제 논의 착수 추진 등 일본의 새로운 안보정책 책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약 1년여의 검토 작업을 토대로 아베정권은 2013년 12월 17일 전후 최초로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²⁰⁾을 책정하여 제시하는 한편, 2010년에 개정된 바 있는 방위계획대강을 수정하여 <방위계획대강 2014>를 발표하였다.²¹⁾ 특히 아베정권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은 일본의 중장기 국가안보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보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

20) 首相官邸,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2013.12.17.),” <http://www.kantei.go.jp/jp/kakugikettei/2013/_icsFiles/afieldfile/2013/12/17/20131217-1_1.pdf>. (검색일: 2016.9.28.).

21) 防衛省, “平成26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2013.12.17.),” <<http://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2014/pdf/20131217.pdf>>. (검색일: 2016.9.28.); 아베정권은 <방위계획대강 2014>와 함께 중장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관한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을 명시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14~2018)’을 책정·발표하였다. 防衛省, “中期防衛力整備計画(平成26年度~平成30年度)について(2013.12.17.),” <http://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2014/pdf/chuki_seibi26-30.pdf>. (검색일: 2016.9.28.).

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대외전략 기조: ‘국가안보전략’

최근 중국의 급속한 국력신장과 함께 미중 G2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제적인 파워 밸런스에 변화의 징후가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강력한 경제,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한층 더 가속될 것이며, 특히 미중시대의 향후 판세를 가늠하는 시험무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안보환경에 대해 아베정권은 ‘국가안보전략’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안전과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외적인 안보전략 방향을 제시하였다.²²⁾

가. 국제안보환경 인식: 국제적인 파워 밸런스의 변화와 ‘중국 위협론’

아베정권의 국제안보환경에 대한 인식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과 함께 국제적인 파워 밸런스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 상황이 국제정치의 역학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 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구축된 국제질서가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미국은 국제적인 파워 밸런스의 변화를

²²⁾ 首相官邸,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2013.12.17.),” pp. 5~6.

주도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 (presence)을 유지하기 위해 안보·경제정책의 중점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²³⁾

둘째, 아베정권은 국제적인 파워 밸런스의 변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안보 분야의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서 문제와 갈등을 촉발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는 정치, 경제, 사회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된 지역 각국의 안보관(觀)이 다양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핵 보유를 추구하는 국가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 분야의 지역적 협력들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문제시하고 있다. 특히 아베정권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 및 군사적 도발행위와 함께 2010년 센카쿠 열도 사태 이후 현저하게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적 행보를 들고 있다.

나. 일본의 국가안보 목표와 대외전략 기조

이상과 같이 아베정권이 전후 최초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을 책정하여 발표한 것은 급변하는 국제안보환경 속에서 일본이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국가이익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안보 목표, 나아가 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베정권은 ‘국가

²³⁾ 이 외에도 ‘국가안보전략’에는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국제테러, 해양·우주공간 및 사이버 공간과 같은 국제 공공재(Global Commons)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활용을 방해하는 위협 등이 명시되어 있다.

안보전략'에서 평화국가 일본이 지향해야 할 국가 이념으로서 국제협조 주위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주창하는 동시에 일본의 국가안보 목표와 안보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 국가안보 목표

아베정권은 '국가안보전략'에서 일본의 국가안보 목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일본의 주권 및 독립을 유지하고 영역을 보전하며 일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풍부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삼고 있는 일본의 평화와 안전 및 존립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²⁴⁾

다음으로 경제발전을 통해서 일본과 일본 국민의 번영을 실현하고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보다 확고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해양국가 일본은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로운 무역과 경쟁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실현하는 자유무역체제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높은 투명성과 안전성을 갖춘 국제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국익을 수호하고 '적극적 평화주의' 원칙에 입각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책임을 다한다는 안보전략 기조하에 다음과 같은 국가안보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²⁵⁾

I
II
III
IV
V
VI

²⁴⁾ 首相官邸,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2013.12.17.),” pp. 4~5.

²⁵⁾ *Ibid.*, pp. 4~5.

〈일본의 국가안보 목표〉

1. 일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그 존립을 마지막까지 지키기 위해 필요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일본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이 미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만일 위협이 미칠 경우에는 해당 위협을 격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2. 미일동맹 강화 및 지역 내외의 동반자 국가들과 신뢰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안보협력을 추진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을 개선하고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감소시키는 것이다.
3. 부단한 외교적 노력과 기일층의 인적 공헌을 통해 보편적 가치 및 룰에 입각한 국제질서의 강화, 분쟁 해결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국제적인 안보환경을 개선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번영된 국제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출처: 首相官邸,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2013.12.17.),” pp. 4~5, <http://www.kantei.go.jp/jp/kakugikettei/2013/_icsFiles/afiedfile/2013/12/17/20131217-1_1.pdf>. (검색일: 2016.9.28.)에 의거하여 필자 작성.

(2) 대외전략 기초

위와 같은 일본의 국가안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아베정권은 대외적인 안보전략 기초로서 1) 독자적인 방위력 증강, 2) 미일동맹의 강화, 3) 한국, 호주, ASEAN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적극적인 안보협력관계 구축 방침을 밝히고 있다.²⁶⁾

우선 미일동맹 체제와 관련하여 아베정권은 ‘국가안보전략’에서 그동안 미일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으며, 이러한 인식 하에 앞으로도 미일동맹체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주일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확보하

²⁶⁾ 防衛力の在り方検討のための委員会, “防衛力の在り方検討に関する中間報告(2013.7.26.),” <http://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2013_chukan/20130726.pdf>. (검색일: 2016.9.28.).

는 동시에 미일동맹의 억지력 및 대처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강조하였다.²⁷⁾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아베정권은 미국과 방위협력 기조 및 미일 간 역할·임무·능력에 대한 상호 간 논의를 통해 미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한편,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일 양국의 관여를 확대하여 무력 사태에 이르지 않은 이른바 ‘그레이존(gray zone)’ 사태에 대한 공동 대응 등 평시부터 각종 사태 발생 시의 대응까지 모든 상황에 대처 가능한 협력 태세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²⁸⁾ 그리고 이를 위해 연합 훈련, 공동 정보 수집·경계감시·정찰 활동(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및 미군과 자위대의 시설·구역의 공동 사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탄도미사일 방어, 확장역지에 관한 협의 등 각종 사태에 대한 대처 및 증장기 전략을 포함한 각종 운용 협력 및 정책 조정을 한층 더 긴밀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피력하고 있다.²⁹⁾

다음으로 한국, 호주 등 우호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ASEAN과의 경제연대 강화’, ‘日-ASEAN 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첫째, 한국과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및 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등을 통해 상호 간 협력기반을 확립하고, 호주와는 국제평화유지활동

27) 首相官邸,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2013.12.17.),” pp. 18~20; 防衛省, “平成26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2013.12.17.),” pp. 7~9.

28) 그레이존 사태는 무력공격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침해, 즉 완전한 평시도 유사시도 아닌 사태가 발생하여 무력공격 사태로 확대되는 등 일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태로서, 경찰력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29) 이 외에도 ‘국가안보전략’에는 미일 간에 해적 대처, 역량강화사업, 인도적 지원·재해 구원, 평화 유지와 테러 대책 등에 관한 협력을 비롯해 해양·우주·사이버 협력 등 분야에 더해 상호 운용성 향상 등 미일동맹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장비·기술 및 인적교류 등 분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 명시되어 있다.

I
II
III
IV
V
VI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연합훈련 등을 적극 실시하여 양국 군 간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양자 간 협력관계를 전제로 하여 한·미·일, 미·일·호의 3국 간 협력 체제를 구축·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둘째, ASEAN 국가들과의 관계를 가일층 강화하기 위해 연합훈련 및 역량강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방재 분야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도와는 해양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연합훈련 및 국제평화유지 활동을 적극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3. 아베정권의 대외전략 평가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기조는 미일동맹 강화와 한국, 호주 등 우호국과의 안보협력관계 구축, 나아가 일본의 독자적인 방위력 증강의 3개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아베정권은 국제적인 파워 밸런스의 변화 가능성에 더해 급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한다는 목표하에, 전후 최초로 ‘국가안보전략’을 책정하는 등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안보정책을 전개해 왔다.

특히 미일동맹 강화와 한국, ASEAN 등과의 긴밀한 안보협력관계 구축을 중시하는 아베정권의 대외적인 안보전략 기조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영향력 약화에서 기인하는 국제적인 파워 밸런스의 변화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물론 세계 어느 국가에게 있어서도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 관련 논의 동향은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미국 중심의

국제적인 역학구도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며, 실제로 이는 21세기 국제정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적 부상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으로 하여금 동 상황에 대한 대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아베정권의 공세적인 일련의 안보정책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센카쿠 열도 주변, 즉 남서지역의 방위력을 증강하여 중국 해공군의 공세적인 군사행동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아베정권은 무력 분쟁 상황은 아니지만 경찰력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그레이존’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구체화하는데 주력해 왔다. 이러한 정책은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센카쿠 열도에 어민으로 위장한 시위대가 상륙하는 경우, 중국 잠수함이 오키나와 주변 영해를 침입하여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항행을 계속하는 경우 등이 아베정권이 강력한 대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레이존 사태에 해당한다.

Ⅲ. 아베정권의 동북아시아 전략



아베정권은 2013년 12월 전후 최초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을 책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안보환경 속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국가안보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베정권은 ‘국가안보전략’에서 일본이 지향해야 할 국가이념으로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주창하는 동시에 일본의 독자적인 방위력 증강, 미일 동맹 강화, 한국·호주 등 우호국과의 안보협력관계 구축을 3대 안보전략 기조로 제시하였다.

1. 미일동맹 강화 전략

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

2013년 10월 3일 미일 양국은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의’)를 개최하여 미일방위협력지침(이하, 미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공식 합의하였다. 이를 전제로 아베정권은 미국과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동 가이드라인 개정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하였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문제와 관련하여 아베정권은 2014년 5월 15일, 이를 한정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³⁰⁾ 이러한 정책 방침은 같은 날 아베 수상이 자신의 자문기관인 <안보법제 간담회>³¹⁾로부터

³⁰⁾ 首相官邸, “安倍内閣総理大臣記者会見(2014.5.15.),” <http://www.kantei.go.jp/jp/96_abe/statement/2014/0515kaiken.html>. (검색일: 2016.9.28.)

³¹⁾ 首相官邸, “安全保障の法的基盤の再構築に関する懇談会報告書(2014.5.15.),” <<http://www.kantei.go.jp/jp/singi/anzenhosyou2/dai7/houkoku.pdf>>. (검색일: 2016.9.28.)

I
II
III
IV
V
VI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수령한 후 표명한 것이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주권국가인 이상 당연히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일본 방어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헌법 제9조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에 대해 아베정권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적 행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본 자신의 방위력 증강에 더해 미일동맹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후자를 위해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아베정권은 2013년 2월 〈안보법제 간담회〉를 가동시켜 헌법 9조가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작업을 실시하였다. 〈안보법제 간담회〉 보고서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제언 내용, 그리고 보고서의 제언에 대한 아베정권의 기본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안보법제 간담회〉 보고서는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해온 기존의 헌법해석에 대해 개별적 자위권과 마찬가지로 집단적 자위권 역시 헌법 9조가 인정하고 있는 일본 방어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무력 행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위헌(違憲)이 아니라는 해석을 제시하였다. 단, 보고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1) 일본과의 관계가 밀접한 외국에 대해 무력 공격이 발생하여, 2) 그 사태가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해당 국가의 명시적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4) 필요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³²⁾

³²⁾ 首相官邸, “安全保障の法的基盤の再構築に関する懇談会報告書(2014.5.15.)”; 〈안보법제 간담회〉 보고서는 전제조건을 내걸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이에 대해 아베정권은 동 보고서의 제언을 전부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헌법 9조에 명시되어 있는 ‘필요 최소한’의 무력사용 권리에는 개별적 자위권은 물론 집단적 자위권 또한 포함되며, 집단안전보장 조치에의 참가 등도 위헌(違憲)이 아니라는 <안보법제 간담회>의 해석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서, 이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헌법 9조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당연히 용인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일본 국민과 일본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조치는 용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³⁾ 아베정권은 2014년 7월 1일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방침을 정식으로 발표하였다.³⁴⁾

나. 미일 가이드라인 2015와 새로운 동맹체제의 정립

아베정권은 미일동맹 강화 차원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한 검토 작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일 가이드라인의 개정 작업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약 1년 반 동안의 개정 작업 후 미일 양국은 2015년

라는 조건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간담회 보고서가 ‘해당국의 요청 확보’ 조건에 관해서 예외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과 함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범위와 관련하여 지리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³³⁾ 장혜진·김두승,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전망과 안보적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안보정책분석, 2014.5.20.), <<http://www.kida.re.kr/nasa/report/detail.asp?idx=1100&cate=6&cyar=0¶ms=cate=6>>page=>. (검색일: 2016.9.28.).

³⁴⁾ 首相官邸, “臨時閣議案件: 国の存立を全うし, 国民を守るための切れ目のない安全保障法制の整備(2014.7.1.),” <http://www.kantei.go.jp/jp/kakugi/2014/_icsFiles/afieldfile/2014/07/22/260701rinjigijiroku.pdf>. (검색일: 2016.9.28.).

4월 27일 ‘2+2 회의’를 개최하여 ‘미일 가이드라인 2015’를 책정·발표하였다.³⁵⁾ 미일 가이드라인에서는 양국이 공통으로 대응할 안보상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의 역할과 임무, 상호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미일 가이드라인 2015는 <표 I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8개 분야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일 가이드라인 2015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⁶⁾

표 III-1 미일 가이드라인 2015의 핵심내용

방위협력과 지침의 목적	양국 간 안전보장 및 방위협력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미일 간 역할/임무, 협력/조정문제에 관해 일반적인 틀 및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	
기본 전제 및 사고	미일안보조약의 기본 틀 유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가 주권의 평등 등 유엔헌장 규정 및 관련 국제법 준수, 미일 양국의 국내법 및 국가안보정책의 기본방침 준수, 전수방위원칙 및 비핵3원칙 준수 등	
동맹 내부 조정	동맹조정 메커니즘, 운용면의 조정, 공동계획의 작성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의 빈틈없는 확보	평시 협력 조치	정보수집/경계감시 및 정찰, 방공 및 미사일 방어, 해양안전보장, 자산(asset) 보호, 훈련 및 연습, 후방지원, 시설 사용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에 대한 대처	비전투원 대피 활동, 해양안전보장, 피난민 대응 관련 조치, 수색/구조, 시설/구역 경호, 후방지원, 시설 사용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발생시 대처행동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예상되는 경우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작전 구상, 작전 지원 활동 등

³⁵⁾ 外務省, “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2015.4.27.),” <<http://www.mofa.go.jp/mofaj/files/000078187.pdf>>. (검색일: 2016.9.28.).

³⁶⁾ 미일 가이드라인 2015에서 강조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자(이기태·김두승)들이 이전에 작성한 내용을 수정 및 가필하였음을 밝힌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동아시아 전략평가』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pp. 123~125.

	일본 이외의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 사태 발생시 대처행동	자산(asset) 방호, 수색/구조, 해상작전, BMD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작전, 후방지원
	일본의 대규모 재해에 대한 대처 관련 협력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국제적인 활동 관련 협력	평화유지활동, 해양안전보장, 파트너의 능력 구축 지원, 비전투원 대피 활동, 정보수집/경계감시 및 정찰, 후방지원 등
	3개국 및 다국간 협력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 관한 협력	우주에 관한 협력, 사이버 공간에 관한 협력	
미일 공동 대처	방위장비/기술 협력, 정보협력/정보보전, 교육/연구교류	
수정/개정 절차		

출처: 外務省, “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2015.4.27.),” <<http://www.mofa.go.jp/mofaj/files/000078187.pdf>>. (검색일: 2016.9.28.)에 의거하여 필자 작성;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년 동아시아 전략평가』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p. 123 재인용.

첫째, 미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안보적 핵심 과제를 ‘중국’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일 가이드라인 2015 본문에서 ‘중국 위협론’에 관한 명시적 언급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1997년의 미일 가이드라인(미일 가이드라인 1997)이 그랬듯이 미일 가이드라인 2015 역시 미일 양국의 공통 전략목표를 가지고 있다.³⁷⁾ 미일 가이드라인 2015에는 ‘그레이존 사태’에 대한 미일 공동 대응 방침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중국의 공세적 군사활동에 대한 견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 미일 가이드라인 2015에는 중국 어민의 센카쿠 열도 상륙 등 ‘도서 방어’에 대한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 대응 방침이 규정되어 있다.³⁸⁾

둘째, 미일 가이드라인 2015 책정을 계기로 미일동맹은 평시부터

37) “新日米防衛指針 国民不在の安保改定,” 『毎日新聞』, 2015.4.28.

38) 外務省, “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2015.4.27.),” pp. 3~10.

I
II
III
IV
V
VI

유사시까지 각종 사태에 빈틈없는 대응이 가능해졌다.³⁹⁾ 미일 가이드라인 2015에서 양국은 빈틈없고 실효적인 동맹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동맹조정 메커니즘’을 설치하여 미일동맹의 운용면의 조정, 공동 작전 계획의 작성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평시 경계 및 감시 활동부터 도서(離島) 점령 등의 그레이존 사태, 국제적 분쟁에 대처하는 미군을 비롯한 타국 군대에 대한 후방지원,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적용되는 유사사태까지 여러 사태에 빈틈이 없고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⁴⁰⁾

셋째, 미일동맹의 군사적인 활동 반경이 일본 주변지역에서 전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일 가이드라인 1997은 한반도 유사시에 미일 간의 역할 및 임무 분담 등을 포함한 공동 작전계획이었다. 반면에 미일 가이드라인 2015는 기존의 ‘주변사태’를 일본의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영향사태’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하고, 자위대의 후방지원 임무에 따르는 지리적 제약을 없애고 일본 이외 지역에서 미군을 비롯한 타국 군대에 후방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실제로 미일 가이드라인 2015는 한반도, 일본, 대만해협에서 발생 가능한 유사사태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 해상교통로(sea lane)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긴급사태에 대한 미일의 공동 대응을 상정하여 작성된 것이다.⁴¹⁾

넷째, 미일 가이드라인 2015는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의 한반도 영역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미일 가이드라인 2015에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과 연관이 있는 부분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에 대한 대처’와 ‘일본 이외 국가를 향한

39) “防衛協力指針 日米同盟の実効性を高めたい,” 『読売新聞』, 2015.4.28.

40) “日米新防衛指針 平和を守る同盟の再構築だ,” 『産経新聞』, 2015.4.28.

41) “防衛協力指針 日米同盟の実効性を高めたい,” 『読売新聞』, 2015.4.28.

무력공격에 대한 대처’ 부분이다. 이들 개념은 아베정권이 법제화한 ‘평화안전법제’에서는 각각 ‘중요영향사태법’과 ‘존립위기사태법’으로 재정의되어 있는데, 미일 가이드라인 2015가 한반도 유사시 존립위기 사태에 관한 법률에 입각한 일본 자위대의 관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다. 평화안전법제의 정비

미일 가이드라인 2015 책정 후 아베정권은 같은 해 9월 동 가이드라인의 일본 국내법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평화안전법제의 법제화에 착수하였다.⁴²⁾ 평화안전법제는 ‘그레이존’ 사태를 포함한 일본의 안전 보장을 확고히 한다는 목표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비된 것이다.⁴³⁾

그러나 동 법제 정비의 또 하나의 목적은 미일동맹 강화 차원에서 새로 책정된 미일 가이드라인 2015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일본 국내의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방침 역시 미일 가이드라인 2015에 명시되어 있는 미일 양국, 특히 일본의 역할 분담의 수준 및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평화안전법제는 자위대법, 중요영향사태법, 무력공격 및 존립위기사태법, 선박검사활동법, 국제평화협력법(PKO법) 등 기존 10개 법률을 개정한 평화안전법제 정비법과 1개의 신설법(국제평화지원법)으로 구성되어 있다.⁴⁴⁾ <그림 III-1>은 평화안전법제

⁴²⁾ 高橋杉雄, “日本——安全保障政策のアップグレード,” 防衛省防衛研究所編, 『東アジア戦略概観2016』(東京: アーバン・コネクションズ, 2016), p. 284.

⁴³⁾ 평화안전법제는 2015년 5월 15일, 각의 결정된 후 중의원·참의원의 심의를 통과하여 2016년 3월에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I
II
III
IV
V
VI

의 주요 법률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이미지화한 것이다.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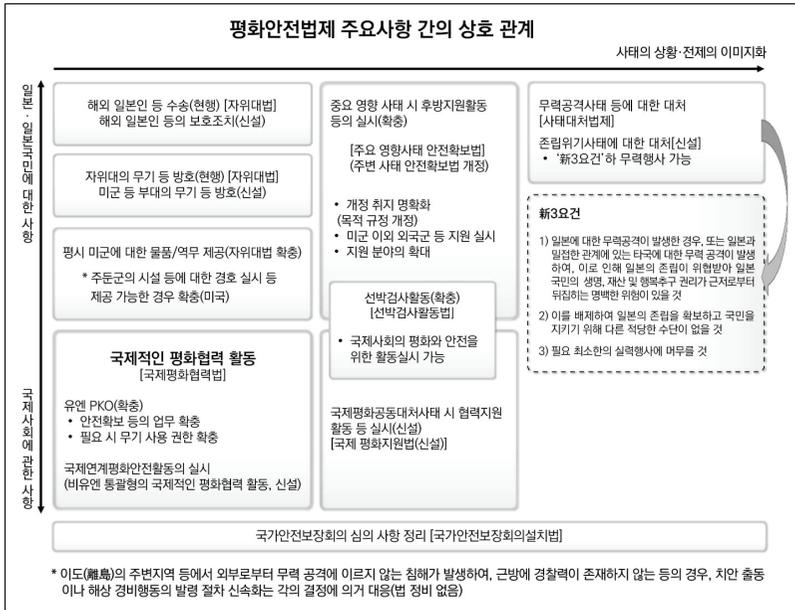
평화안전법제 중에서 일본의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정비된 법률은 자위대법, 중요영향사태법, 무력공격사태 및 존립위기사태법, 선박검사활동법 등이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된 법률은 국제평화협력법, 국제평화지원법, 선박검사활동법이다. 전자는 일본의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률이며, 후자는 일본의 안보보다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정비된 법률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이 국제적인 평화 협력 및 지원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국제법적인 정당성 확보 필요성과 일본 국내법적인 절차가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면 일본이 국제 평화지원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유엔 결의 및 국회의 사전 승인 등이 필수불가결하다. 이처럼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비된 법률은 중요영향사태 등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한 대처와는 달리 상당히 엄격한 절차상의 제약을 가지고 있다.⁴⁶⁾

44) 内閣官房, “国家の存立を全うし, 国民を守るための切目のない安全保障法制の整備について,” <<http://www.cas.go.jp/jp/gaiyou/jimu/pdf/anpohosei.pdf>>. (검색일: 2016.9.28.).

45) 内閣官房·内閣府·外務省·防衛省, “平和安全法制の概要—わが国及び国際社会の平和及び安全のための切れ目のない体制の整備,” <www.cas.go.jp/jp/gaiyou/jimu/pdf/gaiyou-heiwaanzenhousei.pdf>. (검색일: 2016.9.28.); 高橋杉雄, “日本—安全保障政策のアップグレード,” p. 289.

46) 高橋杉雄, *Ibid.*, p. 291.

그림 III-1 ▶ 평화안전법제의 개요



출처: 内閣官房·内閣府·外務省·防衛省, “平和安全法制の概要—わが国及び国際社会の平和及び安全のための切れ目のない体制の整備,” <www.cas.go.jp/jp/gaiyou/jimu/pdf/gaiyou-heiwaanzenhousei.pdf>. (검색일: 2016.9.28.)을 필자가 재구성.

아베정권은 급변하는 국제안보환경 속에서 일본의 국익과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태세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목표에 더해, 특히 미일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자위대의 역할 분담 확대를 일본 국내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평화안전법제를 정비하였다. 동 법제의 정비가 갖는 함의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여 존립위기사태에 대한 대처를 위해 법 정비를 실시하고 있는 점이다. 존립위기사태법은 2014년 7월 각의 결정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 9조하에서 허용되는 자위 조치’라는 헌법 해석 변경의 핵심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다. 존립위

기사태법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일본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거로부터 뒤집힐 수 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무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자위대의 무기 사용 권한이 확대된 점이다. 기존 법률하에서 자위대의 무기 사용은 자기방어 및 무기 방호를 위한 목적(‘자기보존형’)에 한정하여 허용되었다. 이번에 정비된 평화안전법제는 자위대원 본인은 물론 임무 수행 과정에서 자위대원의 보호하에 있는 타인(자위대원 외)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 사용과, 해외 활동 시 타국 군 요원과의 공동 방어 목적의 무기 사용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군을 포함한 타국 군에 대해서도 자기방어 및 무기 방호를 위한 ‘자기보존형’ 무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⁴⁷⁾

셋째, ‘무력행사와의 일체화’ 관련 주장을 염두에 두면서 자위대의 활동 조건, 지역, 무기 사용의 권한 등을 수정하여 중요영향사태(중요영향사태법) 발생 시 지원 활동 및 국제평화협력 활동(국제평화협력법+국제평화지원법) 시 자위대의 활동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활동이 타국의 ‘무력행사와 일체화’됨으로써 위헌(違憲) 비판에 직면하는 경우가 없도록 자위대의 지원 활동을 ‘후방지역, 비전투지역’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한정해 왔다. 이에 대해 아베정권은 ‘무력행사와의 일체화’ 문제와 관련해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무력행사와의 일체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 일률적으로 획정하는 대신, ‘타국이 현재 전투행위를 실시하

⁴⁷⁾ 이 외에도 평화안전법제는 유엔평화유지활동 및 해외 일본인 보호조치 등과 같은 임무 수행 시 자위대의 ‘자기보존형’ 무기 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분쟁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유엔평화유지군, NGO 요원, 민간인 등의 보호와 관련된 출동 경호 목적의 무기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

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 실시하는 자위대의 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위헌(違憲)이 아니라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였다.

라. 미일동맹의 공통전략 목표: 대중국 견제

미일 가이드라인 2015를 책정·발표한 다음날인 2015년 4월 28일 미일정상회담에서 미일 양국은 동 가이드라인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의 조기 체결을 통해 국제적인 과제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⁴⁸⁾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미국과 일본이 70년간 세계평화와 안전, 번영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온 파트너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금번 양국 정상회담은 미일 양국 간 파트너십 변화에 있어서 역사적인 전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⁴⁹⁾ 이를 전제로 양국 정상은 ‘일본의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 정책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을 통해 평화롭고 번영하는 지역 및 국제사회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양국 정상은 “힘이나 강제에 의해 일방적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함으로써 주권과 영토적 일체성의 존중을 저해하는 국가의 행동이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은 미일 양국이 구축해온 많은 것들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⁵⁰⁾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협력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동중국해를 비롯한 남중국해 등의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48) 外務省, “日米共同ビジョン声明(2015.4.28.),” <http://www.mofa.go.jp/mofaj/na/na1/us/page3_001203.html>. (검색일: 2016.9.28.).

49) *Ibid.*

50) *Ibid.*

공세적인 군사 활동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나타낸 것이며, 양국의 공동 대응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미일 가이드라인 2015는 이러한 안보상황에 대한 미일 양국의 공동 대응태세에 관한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평화안전법제는 소위 말하는 '기능하는' 미일동맹 체제를 일본 국내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정비된 법적인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북한의 핵위협을 비롯해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안보기재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균형 전략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가 담보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⁵¹⁾

한편,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인 영향력 유지에 기여하며, 또한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 행동을 견제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대등한 미일동맹 관계 구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²⁾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아베정권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대한 배려 속에 방위예산 증액,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 미일 가이드라인 2015 채택, 나아가 평화안전법제의 정비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미 협력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배경에는 일차적으로 일본의 역할 분담 확대를 통한 '대등한' 미일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보통국가 일본'의 실현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전략적 정책 사고가 존재하고 있다.

51) 김두승, “신미일방위협력지침과 한국의 안보,” 이창형 외, 『2014~2015 한국의 안보와 국방』 (서울: KIDA Press, 2015), pp. 119~122.

52) “新日米防衛指針 国民不在の安保改定,” 『毎日新聞』, 2015.4.28.

2. 대중전략: 대중국 견제 전략

가. 대중국 견제 전략의 전개

일본 정부는 북한 위협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미일동맹 강화 및 일본의 자체적인 방위력 증강을 설명해 왔다. 보통국가화가 결국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일본 정부를 비롯한 일본 내에서는 미일동맹 강화 및 대한민국 안보협력 구축, 자체 방위력 증강을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 및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평가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에 있었던 센카쿠 열도 사태 이후 아베정권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함께 중국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⁵³⁾

아베정권은 중국의 공세적 군사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 호주, ASEAN 등 아시아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먼저 아베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등 미일동맹 강화정책을 전개하였다. 한편, 후자와 관련하여 아베정권은 정권 출범 직후 동남아 3국 방문(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2013년 1월), 미국 방문(2월), 몽골 방문(3월), 러시아 방문(4월), 일-인도정상회담(5월), 제2차 동남아 방문(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7월) 등을 통해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안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와 동시에 아베정권은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일본의 독자적인 방위력 증강에도 역점을 두었다. 첫째, 남서지역의 방위력을 집중적으로

⁵³⁾ 김두승, “아베 정권의 대중정책과 한국: 견제와 타협의 이원적 접근전략,”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1집 (2016), p. 44에서 재인용.

I
II
III
IV
V
VI

증강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군의 신형 MV-22 오스프리 수직이착륙 수송기의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배치 계획을 추진하여 2013년 8월에 최종적으로 24대를 배치 완료하였다. 또한 육상자위대의 연안감시 부대를 요나구니섬(与那国島)에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⁵⁴⁾ 이에 더해 아베정권은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에 이도(離島) 유사(有事)와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시 초기대응을 담당하는 육상자위대의 경비부대 및 2018년까지 동 지역에 550명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및 지대함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⁵⁵⁾

둘째, 해병대 기능을 갖춘 수륙기동단 창설에 착수하였다.⁵⁶⁾ 2013년 7월 26일 일본 방위성은 새로운 방위계획대강 책정을 위한 중간보고서(「방위력의 바람직한 모습 검토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다.⁵⁷⁾ 동 보고서에서 방위성은 센카쿠 열도 등 도서방위를 위해 ‘기동전개 능력 및 수륙양용기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상륙작전과 같은 자위대의 해병대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54) “与那国配備白紙も 陸自沿岸監視部隊,” 『琉球新報』, 2013.4.19.; “陸自, 最西端に監視部隊配備へ…島の土地賃借,” 『読売新聞』, 2013.6.28. 아베정권은 2016년 3월 28일 요나구니섬에 육상자위대 연안감시부대를 배치 완료하였다(“陸自が初配備 沿岸監視隊駐屯地が開設,” 『毎日新聞』, 2016.3.28.).

55) “奄美大島への陸自部隊配備, 地元が受け入れへ,” 『読売新聞』, 2014.8.13. 그동안 아베정권은 2018년 말까지 경비부대와 미사일 부대를 아마미오시마의 2개 지역에 약 550명 규모, 오키나와현의 미야코지마(宮古島)에 700-800명 규모의 육상자위대 전력을 배치 완료한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또한 2019년 이후 오키나와의 이시가 키지마(石垣島)에 500-600명 규모의 경비부대와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기 위한 토지구입 등 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 하에 남서지역의 방위력 증강을 추진해 왔다(“石垣島に500人規模の陸自配備へ…南西諸島の防衛強化,” 『朝日新聞』, 2015.11.26.). 그러나 최근 아베정권은 이들 계획 중에서, 이시가키지마에 대한 경비부대 배치 계획을 앞당겨 2017년도 방위예산에 부대 주둔을 위한 토지취득 비용을 포함시켰다(“石垣島の陸自配備, 2年前倒し 宮古・奄美と同時進行 尖閣への中国脅威にらみ,” 『産経新聞』, 2016.5.30.).

56) 방위성, “平成26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2013.12.17.).”

57) 방위력이在り方検討のための委員会, “防衛力の在り方検討に関する中間報告(2013.7.26.).”

기조하에, 현재 아베정권은 2018년을 목표로 육상자위대의 서부방면대(西部方面隊) 보통과연대(普通科連隊)를 중심으로 한 약 3,000명 규모의 수륙기동단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영유권 갈등에 대처하는 동시에 일본의 국토 방위와 타국에 점령당한 영토를 탈환한다는 것이다.⁵⁸⁾

나. 일중 관계의 ‘관리’와 견제 전략의 지속

2010년의 센카쿠 열도 사태 이후 중국 해공군의 공세적인 군사활동이 갈수록 활발해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아베정권은 미일동맹 강화에 더해 필리핀, 베트남 등 ASEAN 국가들과의 안보협력관계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남서지역의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요나구니섬에 육상자위대의 연안감시부대 배치, 수륙기동단 창설 등 대중 견제 차원의 군사적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아베정권은 이처럼 대중국 견제정책을 지속하면서도 양자간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에도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⁵⁹⁾ 2014년 11월 10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⁵⁸⁾ “離島防衛訓練 自衛隊に海兵隊機能が必要だ,” 『読売新聞』, 2013.6.25.; “일본 해병대 창설 본격화 야욕,” 『한국일보』, 2013.7.16.

⁵⁹⁾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편, 『2015 국제정세 전망』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4), pp. 48~49; 外務省, “日中関係の改善に向けた話合い(2014.11.7.),” <http://www.mofa.go.jp/mofaj/a_o/c_m1/cn/page4_000789.html>. (검색일: 2016.9.28.). 일중 양국은 2014년 11월 7일 정부 당국자 간 접촉을 갖고 상호 간 관계 개선을 위한 1)일중의 전략적 호혜관계의 지속 발전, 2)역사 문제에 대한 진전된 상호 간 인식 확인, 3)센카쿠 문제 등 긴장완화를 위한 위기관리 메커니즘 구축, 4)정치적 신뢰회복 노력의 4개 항목에 합의하였다. 동 4개 합의사항은 일중 양국 정부가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호 관계개선을 위해 합의한 것이다.

정상회담에 참석한 아베 수상은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동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일중 방위당국 간 해상연락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운용해 나가기로 하였다.⁶⁰⁾

이러한 일중 간의 전략적인 타협은 아베정권은 물론 중국의 시진핑 체제 역시 일중 관계의 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4월 2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반둥회의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아베 수장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진 것 역시 악화된 양국 관계를 개선·관리할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한 결과였다.⁶¹⁾ 2014년 11월의 일중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상호 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위 당국자 협의를 재개하여 2015년 5월 29일 양국 간 ‘해공연락 메커니즘’을 조기에 운용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⁶²⁾ 그러나 동 연락 메커니즘 구축 논의는 현재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아베정권은 일중 간의 긴장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베정권의 대중견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베정권의 대중견제 정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안보정책 동향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아베정권이 남서지역의 방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는 사실에 더해 미일 가이드라인 2015를 책정하여 중국의 군사

60) 外務省, “日中首脳会談(2014.11.10.),” <http://www.mofa.go.jp/mofaj/a_o/c_m1/cn/page3_000999.html>. (검색일: 2016.9.28.).

61) 外務省, “日中首脳会談(2015.4.23.),” <http://www.mofa.go.jp/mofaj/a_o/c_m1/cn/page4_001136.html>. (검색일: 2016.9.28.).

62) “海上保安当局間で対話窓口=日中の設置へ合意-事務レベル協議” 『時事通信』, 2015.1.23.; “日中防衛協議 海上連絡体制の早期運用で一致” 『毎日新聞』, 2015.5.30.

적 행동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태세를 구축하고 있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미일 가이드라인 2015가 중국 어민의 센카쿠 열도 상륙 상황 등 도서방어를 위한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 대처 방안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⁶³⁾

한편, 아베정권이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ASEAN 국가와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사실에 더해 남중국해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활동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표명하고 있는 사실 역시, 동 정권의 대중견제정책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3. ASEAN과의 안보협력: 대중국 포위 전략

가. ASEAN과의 대중국 견제 네트워크 구축 전략

그동안 아베정권은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ASEAN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행보를 취해 왔다. 아베정권의 ASEAN 접근 전략은 일본의 경제 재생을 위한 전략적인 판단⁶⁴⁾에서 비롯된 측면에 더해, 앞서 언급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에 입각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아베 수상은 2012년 12월 취임 이후, 단 11개월 만에 ASEAN 10개

⁶³⁾ 外務省, “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2015.4.27.),” p. 10.

⁶⁴⁾ 아베정권의 ASEAN 접근은 기본적으로 시장 확보라는 경제적 측면이 고려된 점을 부정할 수 없다. ASEAN 시장은 경기 침체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일본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시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ASEAN은 인구 6억 명의 대규모 시장이다. 세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ASEAN은 국내 소비의 증가와 함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ASEAN 주요 5개국의 2012년 성장률은 인도네시아 6.2%, 말레이시아 5.6%, 태국 6.5%, 필리핀 6.8%, 싱가포르가 1.3%를 기록하였다. 참고로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주요 6개국의 중산층(세대당 연간 가처분 소득 5천~3만5천 달러 정도) 규모가 3억 명에 이르는다는 사실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국 모두를 방문하였다. 또한 아베 수상은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베트남 등 ASEAN 3국을 선택했으며, 2013년 12월에는 동경으로 ASEAN 정상들을 초청하여 일본-ASEAN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처럼 아베정권이 ASEAN을 중시하는 이유는 우선 ASEAN 국가와의 안보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현재 ASEAN 가운데 베트남, 필리핀 등 일부 국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아베정권은 이들 국가들과 협력하여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공동 대응태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아베정권이 베트남에 중고 연안경비정 10척을 제공하기로 한 결정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⁶⁵⁾

아베정권은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견제로 설정하고 있는데, ASEAN 국가와의 협력은 동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안보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정권은 '국가안보전략'에서 "국가 안전보장의 과제를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하면서 각국과의 협력을 확대, 심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⁶⁶⁾ 아베정권의 ASEAN 접근 전략은 갈수록 위협적인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행보를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의 산물이다.

나. 남중국해 문제와 ASEAN과의 안보협력 강화

아베정권은 출범 이후 한국, 중국과의 관계보다는 ASEAN 국가들과의 안보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중국 주변국들과의

⁶⁵⁾ 동 연안경비정은 2015년 말 베트남에 제공되었으며, 현재는 신형 연안경비정 6척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⁶⁶⁾ 首相官邸,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2013.12.17.)."

협력관계 구축을 우선하는 이러한 경향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에 더해, 일본의 파트너는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해양국가라는 아베 수상 자신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였다. 2006년 제1차 아베정권 출범 당시 아베 수상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4개국 간 안보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해양안보의 중요성에서 출발한 전략적 ‘다이아몬드 안보’ 협력 구상은 당시에는 관계국 간 이해관계의 불일치로 인해 구체적인 안보협력체로 수렴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사고가 현재 아베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중국 견제 전략에 원용되고 있는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다.⁶⁷⁾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동중국해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 더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지역 국가들 간에 영토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해양안보를 중시하는 아베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안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수상이 취임 이후 ASEAN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강조해온 사실은 동 정권이 대중국 견제 전략의 한 축을 ASEAN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에 두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현재 아베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ASEAN 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제공, 능력구축 지원, 방위장비 제공 등 일련의 정책은 이러한 전략적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방위성은 2012년 이후 ASEAN 국가에 대해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HA/DR), 해적대처 등 분야의 능력구축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⁶⁸⁾

⁶⁷⁾ Michael Green, “Japan is back: Unbundling Abe’s Grand Strategy,” *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 December 2013, pp. 8~9.

⁶⁸⁾ Ken Jimbo, “Power and Influence: New Dimension of Japan-Southeast Asia Security Relations,” 2014 Fall Seminars of Program on US-Japan Relations at Harvard University, November 24, 2014. 일본 정부는 2013년 12월 13일에 필리핀과 ODA 연안경비정 10척을 제공하기로 MOU를 체결한 것을 비롯해, 2012년 이후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 대해서도 연안경비정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는데 최근 베트남에 초계함을 인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더해, 현재 일본

이처럼 아베정권은 남중국해에서 급속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ASEAN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베정권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2015년 4월 22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반동회의'에서 행한 아베 수상의 연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 연설에서 아베 수상은 “침략 또는 침략의 위협, 무력행사로 타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반동회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후 아시아, 아프리카는 일본의 '원조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파트너'라는 점을 역설하면서 ASEAN 국가들과의 협력 방침을 강조하였다.⁶⁹⁾ 아베정권의 ASEAN과의 안보협력 강화 전략은 최근 필리핀과 베트남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적 능력 구축 지원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우선, 아베 수상은 2015년 6월 4일 필리핀 베니그노 아키노(Benigno Aquino III)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필리핀 간 안보군사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⁷⁰⁾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에서 양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행하고 있는 대규모 매립을 비롯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양국 간 안보대화의 강화, 방위 장비 및 기술 이전 협정 체결 추진, 필리핀 해안경비대의 역량 강화 지원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일본의 자위대가 필리핀 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문부대지위협정(Visiting Force Agreement: VFA)'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⁷¹⁾ 일본-필리핀 정상회담 이후, 아베

정부는 ASEAN 국가들의 해양안보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초계함, 초계기 및 다목적 지원함 등을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69) 外務省, “アジア・アフリカ会議(バンドン会議)60周年記念首脳会議における安倍総理大臣スピーチ: Unity in diversity—共に平和と繁栄を築く(2015.4.22.)” <http://www.mofa.go.jp/mofaj/a_o/rp/page3_001191.html>. (검색일: 2016.9.28.).

70) 外務省, “日・フィリピン首脳会談(2015.6.4.)” <http://www.mofa.go.jp/mofaj/s_sa/sea2/ph/page4_001236.html>. (검색일: 2016.9.28.).

71) “日-필리핀 정상, 남중국해 현상변경 시도 심각한 우려,” 『연합뉴스』, 2015.6.5.,

정권은 필리핀의 해양 경비 및 감시 능력 향상을 위해 일본 해상자위대의 연습기 TC-90 5대를 대여하기로 결정하였다.⁷²⁾

한편 아베정권은 베트남에 대해 앞서 언급한 중고 연안경비정 제공에 추가하여 신형 연안경비정 10척을 추가로 제공하는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5월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베트남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 조치가 해제된 상황은 앞으로 일본의 베트남에 대한 해양 경비, 감시 분야의 능력 구축 지원을 비롯한 무기수출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베 수상은 2016년 5월 28일 구옌 수안 후크(Nguyen Xuan Phuc) 베트남 수상과의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의 군사거점화를 추진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베트남의 해양 법집행 능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신형 연안경비정의 제공 방침을 밝혔다.⁷³⁾

아베정권의 이러한 적극적인 대ASEAN 접근 전략은 미일 가이드라인 2015 책정으로 대표되는 미일동맹 강화정책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행해지고 있는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를 견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⁷⁴⁾ 최근 일본 정부는 남중국해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표출하고 있다. 중국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04/0200000000AKR20150604200300073.HTML?input=1195m>〉. (검색일: 2016.9.28.); “일본, 남중국해 작전반경 넓힐 듯…필리핀, 기지제공 협의,” 『연합뉴스』, 2015.6.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05/0200000000AKR20150605149100084.HTML?input=1195m>〉. (검색일: 2016.9.28.). 일-比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상호 간 방위협력 강화 차원에서 2015년 6월 22일부터 일본 해상자위대와 필리핀 해군은 남중국해에 인접하고 있는 파라완 섬에서 재난구조 훈련을 실시하였다. “比海軍と海自の共同訓練始まる = 中国にらみ協力強化,” 『時事通信』, 2015.6.22.

⁷²⁾ 防衛省, “大臣臨時会見概要(差替え)(2016.5.2).” 〈<http://www.mod.go.jp/j/press/kisha/2016/05/02.html>〉. (검색일: 2016.9.28.).

⁷³⁾ “ベトナムの海上法執行能力強化に協力…首相,” 『読売新聞』, 2016.5.28.

⁷⁴⁾ Ken Jimbo, “Power and Influence: New Dimension of Japan-Southeast Asia Security Relations.”

I
II
III
IV
V
VI

이러한 움직임은 동 지역 내 중국 해공군의 영향력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위성은 중국이 남사군도에 군사기지(항만 또는 활주로)를 건설하게 될 경우, 동 지역에 대한 중국의 함정, 해경선, 작전기 등의 일상적인 전개가 가능하게 되며, 이렇게 될 경우 남중국해 중남부 지역에서의 경계감시 능력 및 작전수행 능력이 급속하게 증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⁷⁵⁾ 이는 일본의 대중국 견제 전략이 남중국해에서도 전개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4. 아베정권의 동북아 안보전략 전망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은 갈수록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적 행보에 대한 미일 양국의 견제정책이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하는 ‘미일 vs 중국’이라는 대결 구도가 점차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양측 간의 관계를 안보군사적인 대립 구도로 평가하는 데는 경제적인 상호의존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안보 분야를 비롯해 역사, 영토 문제 등에 대한 미일 양국과 중국 간의 상호 국익 및 안보전략 적인 이해의 차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을 ‘대화과 협력’보다는 ‘견제와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주요 동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정하에, 아베정권이 미일동맹 체제와 아시아 지역국가들과의 협력하에 대처해야 할 안보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주요 이슈를 식별 제시하면, <그림 III-2>와 같이 다음 4개 분야를 들 수 있다. 앞으로 아베정권은 한반도,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⁷⁵⁾ 防衛省, “南シナ海における中国の活動(2015.5.29.),” p. 14. <http://www.mod.go.jp/j/approach/surround/pdf/ch_d-act_20150529.pdf>. (검색일: 2016.9.28.).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 기조하에 대처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상기 이슈들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미일동맹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앞서 언급한 미일 간 ‘동맹조정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상기 4개 지역의 갈등·분쟁 상황을 상정하여, 양국군의 공동 대응 태세를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978년 미일 가이드라인 책정 후, 1981년 미일 양국이 구소련의 일본 본토 침공을 상정한 ‘작전계획 5051’을 작성했던 사실에서도 확인 가능하다.⁷⁶⁾

그림 III-2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열점 지역



출처: 김두승 외,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 동향』 (서울: KIDA Press, 2017년 출간 예정).

또한, 이러한 가능성은 미일 가이드라인 2015 책정 후 자위대의 통

76) “日米安保 共同作戰研究,” 『朝日新聞』, 1996.9.2.~9.6.(福田毅, “日米防衛協力における3つの転機: 1978年ガイドラインから日米同盟の変革までの道程,” 『レファレンス』, 第56巻 7号 (2006), p. 153 재인용).

합막료감부(이하, '통막')가 미일 양국 군 간의 공동 작전계획에 관한 연구에 착수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통막은 '동맹조정 메커니즘'과 '공동 작전계획 책정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선 전자와 관련하여 통막의 연구는 과거 무력공격 사태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미일 간 동맹조정 메커니즘이 운용됐던 것과는 달리, '평시'에도 운용 가능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미일 양국 군 간의 운용면의 조정 요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후자와 관련하여 연구는 그동안 미일 공동 작전계획의 대외적인 공개가 불가능했던 것과 달리, 미일 가이드라인 2015가 미일 간 '공동작전계획'의 대외적인 '명시'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동 공개 방침은 '역시'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⁷⁷⁾

둘째, 센카쿠 열도의 분쟁 상황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일 가이드라인 2015는 미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핵심 안보과제를 '중국'으로 설정하고 있다. 1978년 미일 가이드라인이 최초로 책정된 이후, 미일 양국이 구소련의 일본 침공을 상정하여 공동 작전계획을 작성했고, 또한 비록 공식적인 확인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일 가이드라인 1997이 일본 본토와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 양국 군의 공동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었듯이 미일 가이드라인 2015 역시 미일 양국의 공통 전략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미일 양국이 동 목표 실현을 위해 공동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미일 가이드라인 2015에는 중국 어민의 센카쿠 열도 상륙 상황 등

⁷⁷⁾ 統合幕僚監部, “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ガイドライン)及び平和安全法制関連法案について,” <www.jcp.or.jp/web_download/data/20150810183700620.pdf>. (검색일: 2016.9.28.).

이른바 ‘그레이존 사태’에 대한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 대응 방침이 포함 되어 있다. 센카쿠 열도 방어 및 탈환 훈련의 일환으로 미일 양국 군은 2015년 9월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동 군사훈련은 미일 가이드라인 2015가 책정된 후 최초로 실시된 것이다. ‘새벽의 기습작전 2015(Dawn Blitz 2015)’로 명명된 동 군사훈련은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공세적인 군사행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둔 미일 양국 군의 군사적인 대응 훈련이었다. 동 훈련은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것이며, 일본의 육해공 자위대 약 1,100명, 미군 약 3,000명이 참가하여 실시되었다.⁷⁸⁾ 이처럼 이미 미일 양국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군사적인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일 양국 군의 공동 작전계획이 이미 작성되어 실전 훈련을 통한 수정 보완 단계에 접어들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앞으로 일본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관여 차원에서 해상교통로(Sea Lines of Communication: SLOCs)의 안전 확보 문제를 중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평화안전법제의 정비 과정에서 아베정권은 존립위기사태의 일례로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제거 작전 수행을 상정하여 제시한 바 있다. 이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일본이 중동지역으로부터의 원활한 원유 수송을 담보하기 위해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대처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78) “後方支援をイメージ・米カリフォルニア州で大規模な日米共同訓練,” 『毎日新聞』, 2015.9.30.

I
II
III
IV
V
VI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아베정권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강압적인 군사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강력한 미일동맹 체제를 구축하는데 주력하는 동시에, ASEAN 국가들과의 안보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진력해 왔다. 이를 통해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안정적인 해상교통로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동 전략하에 아베정권은 남중국해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국군의 군사활동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 힘(power)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군의 움직임은 동 지역 내 중국 해공군의 영향력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위성은 중국이 남사군도에 군사기지(항만 또는 활주로)를 건설하게 될 경우, 동 지역에 대한 중국의 함정, 해경선, 작전기 등의 일상적인 전개가 가능하게 되며, 이렇게 될 경우 남중국해 중남부 지역에서의 경계감시 능력 및 작전수행 능력이 급속하게 증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⁷⁹⁾ 일본 입장에서 볼 때, 동 상황은 일본의 국익과 직결되는 남중국해의 해상교통로가 중국의 군사적 통제 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을 견제하고 억제하기 위해 아베정권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베트남과 필리핀의 군사적 능력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베정권이 필리핀의 해양 경비 및 감시 능력 향상을 위해 일본 해상자위대의 연습기 TC-90 5대를 제공하기로 하는 한편, 베트남에 대해서도 중고 연안경비정 제공에 추가해 신형 연안경비정 10척을 제공하는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2016년 5월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베트남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다. 동 상황은, 앞으로 일본의 베트남에 대한 해양 경비, 감시 분야의 능력 구축 지원을

⁷⁹⁾ 防衛省, “南シナ海における中国の活動(2015.5.29.)”, p. 14.

처럼,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일,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안보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단,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베정권의 대한국 안보협력 중시전략이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에 더해, 대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베정권은 2016년 7월 초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이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베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그동안 일본이 공들여 왔던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의 구축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미 양국이 배치를 결정한 사드 문제는 한국의 의도와는 달리,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역할 분담 (burden sharing)’ 노력의 일환이며 미일 양국의 한·미·일 안보협력 구상에 대한 ‘관여의 시작’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섯째, 미일 가이드라인 2015에 명시되어 있는 ‘동맹조정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공동 대응 태세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화안전법제 중에서, 특히 한반도 유사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은 ‘중요영향사태법’과 ‘존립위기 사태법’이다. 이 두 개의 법률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라 한반도 영역에 대한 자위대의 관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우선 전자의 중요영향사태법은 기존의 주변사태법의 지리적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자위대의 후방지원 범위를 일본 주변지역에서 세계 각지로 확대한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영향사태는 과거

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4_002933.html. (검색일: 2016.9.28.).

와 마찬가지로 일본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한반도의 유사상 황도 당연히 동 개념 속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경우 일본의 자위대가 제3국, 즉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한반도 영역에 진입하는 것은 법적,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중요영향사태법의 제2조 4항에는 '외국의 영역에서의 대응 조치에 관해서는...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 우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⁸²⁾ 따라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자위대 가 중요영향사태법에 의거하여 한반도 영역에서 후방지원 활동을 실시 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존립위기사태법도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직접적인 관여를 담보하는 근거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⁸³⁾ 이번에 개정된 미일 가이드라 인 2015에는 한반도 유사시 등의 상황을 일본의 '존립위기사태'로 정 의하고, 이를 기존의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사태법과 동등하게 취급하 여 대처한다는 방침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상 황을 일본의 국가 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태라고 판단할 경우, 앞서 언급한 중요영향사태법에 입각해 대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반도 유사시 일본 정부가 존립위기사태법에 의거해 관여를 결정할 경우 한국의 동의 없이도 법적·논리적으로는 관여가 가능하다.

이처럼 미일 가이드라인 2015, 나아가 동 가이드라인을 일본 국내법 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정비된 평화안전법제, 특히 중요영향사태법과 존립위기사태법은 앞으로 미일동맹의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 관여 가능 성을 열어 두고 있다. 이를 전제로 할 때, 앞으로 미일 양국이 한국의

⁸²⁾ 内閣官房, “わが国及び国際社会の平和及び安全の確保に資するための自衛隊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新旧対照表),” pp. 57~68, <<http://www.cas.go.jp/jp/gaiyou/jimu/pdf/sinkyuu-heiwaanzenhouseiseibihou.pdf>>. (검색일: 2016.9.28.).

⁸³⁾ *Ibid.*, pp 76~86.

I
II
III
IV
V
VI

동의회에 한반도 유사시에 관여하는 경우에 더해, 한국의 동의가 없는 미일 양국의 '독자적인' 개입을 상정한 공동 작전계획을 작성해 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아베정권의 대한전략



1. 아베정권의 대한 인식 변화

2012년 12월에 있었던 중의원 선거 당시, 자민당은 정책 공약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기초하에 아베정권은 정권 출범 초기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는 동시에, 2013년 1월 4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 특사를 파견하였다. 또한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민주당 정권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해온 사안에 대해 ‘현재의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방침하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유보하였다.⁸⁴⁾ 이와 같이 아베정권은 정권 출범 당시 위안부 문제 등 역사 문제에 관한 한일 간 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 문제 등에 대한 공동 대처 차원에서 한국과의 안보군사협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아베정권은 2013년 12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한국, 호주, ASEAN 국가 및 인도 등 우리나라와 보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인접국이며, 지정학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국과 긴밀히 연계하는 것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비롯한 지역 평화와 안정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⁸⁴⁾ 外務省, “外務大臣会見記録(2012.12.18.),” <http://www.mofa.go.jp/mofaj/press/kaiken/gaisho/g_1212.html#7>. (검색일: 2016.9.28.). 단, 일본 정부가 내각관방에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하여,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구체화하고 있는 사실은 앞으로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에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内閣官房に「領土/主権対策企画調整室」設置,” 『読売新聞』, 2013.2.5.).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3 동아시아 전략평가』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3), p. 270 재인용.

특히 일미한 삼국협력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데 열쇠가 되는 구조이다.⁸⁵⁾

이와 같이 아베정권은 아베가 주창하는 ‘가치관 외교’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을 일본과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아베정권 출범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과 같은 역사 문제로 갈등이 부각되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일본 외무성이 매년 발행하는 ‘외교청서’에서 2008년 이후 한국에 대한 기술을 살펴보면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의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에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표기되어 왔다. 하지만 2015년 외교청서에서는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이 사라지고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바뀌었다.⁸⁶⁾ 또한 2015년 3월 외무성 홈페이지는 한국을 소개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는데 이는 아베 수상이 시정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을 변경했기 때문이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아베 수상은 2013년 2월과 2014년 1월 시정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각각 표현했지만, 2015년 2월 연설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만 언급했다.⁸⁷⁾

이렇게 ‘기본적 가치’라는 표현을 없앤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 검찰이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기소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아베

85) 首相官邸,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2013.12.17).”

86) 外務省, 『外交青書(平成26年版)』(東京: 日経印刷, 2014), p. 21.

87) “日 외무성 홈페이지,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한국 관련 표기 바뀌.” 『동아일보』, 2016.3.20., <<http://news.donga.com/3/all/20160320/77103927/1#>>. (검색일: 2016.9.28.).

정권은 한국에 대해 ‘법의 지배’와 ‘언론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⁸⁸⁾

하지만 아베 수상은 2016년도 시정연설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언급하였고, 이후 외무성 홈페이지에도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나라’라는 표현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는 아베 수상이 2015년 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및 2016년 초에 발생한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북한 리스크에 대한 한·미·일 3국 협력 중요성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아베정권의 대한민국 인식의 변화를 보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모순적 인식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따른 중국위협론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재균형 정책을 표방하며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필요성과 특히 안보적 측면에서 한일 관계의 발전을 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지정학적 측면에서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권하에 들어가는 것을 매우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일본은 한국이 중국에 접근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최근 아베정권이 추진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헌법 개정 움직임, 자체 방위력 증강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오로지 일본 사회의 ‘우경화’라는 프레임으로만 인식하는 한국의 반응 역시 한일 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최희식은 현실상으로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공유하고 있기에 안보적 상호의존성이 높지만, 의식상으로는

⁸⁸⁾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한국에 대한 기술키 변화한 것은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통상적인 표기 수정 과정이라고 설명했지만, 필자와 만난 익명의 일본 외교관은 실제로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I
II
III
IV
V
VI

서로를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⁸⁹⁾ 본 장에서는 이러한 한일 간 안보적 상호의존성과 상호 위협이라는 모순적 인식이 공존하는 가운데 아베정권의 대한국 전략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본다.

2.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과 한일협력

아베정권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대한 고려와 함께 한일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즉,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와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이라는 목표하에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유지 정책에 협력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과의 안보협력관계 구축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한편 한국은 북핵 문제 해결 및 아베정권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중국의 긍정적 역할 등을 고려하면서 일본과의 안보협력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⁹⁰⁾

일본 정부 입장에서 한국 정부의 우호적인 대중 정책 기조는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베정권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언동은 한국과 안보협력관계를 단시일 내에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아베 수상의 지지기반과 정치적 배경을 고려할 때,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의 협력 추진을 위해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역사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⁸⁹⁾ 최희식, “적대적 공존에서 상생적 공존으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제70호 (2015), pp. 1~5.

⁹⁰⁾ Doo-seung Kim and Ki-tae Lee, “Japan Going it Alone toward a Normal Country,” *East Asian Strategic Review 2013* (Seoul: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Strategy, 2013), pp. 180~181에서 재인용.

일본 정부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⁹¹⁾

아베정권은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목표에 대한 배려에 더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일 동맹+한국과의 공조’ 전략을 견지했다. 하지만 아베 수상 및 측근들의 퇴행적인 역사 수정주의 인식에 기초한 여러 발언들, 예를 들면 침략 전쟁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인한 한일 관계의 악화 분위기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접근법 제시와 함께 일본의 대한국 전략은 과거에 없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었다. 한국과의 협력이 단시일 내에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 일본의 전략적 외교는 ASEAN 국가들과의 연계 강화라는 다른 형태의 아시아외교의 추진으로 나타났다.⁹²⁾

3. ‘과거’ 문제와 한일 대북공조체제 구축의 한계

사실 일본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사이의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대한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제1차 아베정권 이전부터 아베 수상은 ‘친한파’의 거두였던 외조부 기시의 영향 때문인지 한국과의 파이프라인(pipeline) 구축에 관심이 있었다.⁹³⁾ 특히 한국의 보수 정치인과의 파이프라인 구축에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제1차 아베정권 시기를 포

⁹¹⁾ *Ibid.*, pp. 180~181.

⁹²⁾ *Ibid.*, pp. 180~181.

⁹³⁾ 필자가 2006년 제1차 아베정권 출범 당시, 아베 수상의 측근이었던 고바야시 유타카(小林 滯) 의원(참의원)으로부터 부탁 받은 것이 한국의 주요 인사(key person)에 대한 리스트 작성이었다. 고바야시 의원은 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사람이 아베 수상이라고 말했으며, 나중에 필자가 작성한 리스트는 수상 관저에까지 올라갔다고 전해 주었다. 당시 한국의 주요 인사는 주로 정계, 재계, 언론계 인사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I
II
III
IV
V
VI

함해서 아베가 정권의 중심부에 등장한 때는 한국의 김대중·노무현 정부라는 진보정권 시대였다는 점에서 아베가 구상하는 파이프라인 구축에 크게 성공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한국에는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적 입장을 뛰어넘어 대일 자세, 특히 역사 인식 문제에는 이념에 상관없이 강경 노선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베가 가진 ‘역사 수정주의’가 한국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아베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한일 관계는 양국 정상이 2012년 말과 2013년 초에 취임한 후에 갈등 관계의 연속이었다. 아베 수상은 취임 1주년인 2013년 12월 26일, 현직 수상으로 7년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엄중히 항의했고, 미국조차 ‘실망’의 뜻을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기자회견에서 무라야마 담화의 정신을 견지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달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아베 수상은 자신의 참배에 커다란 오해가 있다고 하면서 한국과의 정상회담 실현에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국회에서의 질의를 받고 1993년 8월 위안부 관계 조사 결과 발표에 관련된 ‘고노 관방장관 담화(고노 담화)’의 작성 과정을 검증했고, 6월 20일에 보고서가 공표되었다. 일본 정부는 보고가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한 것은 아니고 고노 담화 그 자체에 대한 검토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고노 담화 재검증에 반발하면서 외교부 국장급 협의 개최를 당분간 연장했다.

2013년 2월 12일에 북한이 단행한 제3차 핵실험에 대해 아베 수상은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동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표명했

다.⁹⁴⁾ 이러한 정세 인식하에 그동안 아베정권은 대북강경정책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베정권은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된 북한 당국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왔다.

실제로 2014년 5월, 북일 양국은 북한 정부가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고, 일본 정부가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아베정권은 인적 왕래 규제, 송금·휴대반출 금액 제한, 인도적 목적의 선박 왕래 등 대북 제재조치를 일부 해제하였다. 그러나 당초 아베정권이 기대했던 북한 측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한 조사 결과는 예상과 달리 발표되지 않았다.⁹⁵⁾

2015년 8월 6일 기시다 외상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 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에서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과 회담을 가졌다. 동 회의 석상에서 기시다 외상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기 시작한지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일본인 납치 문제의 최우선적인 해결을 북한 측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재조사를 성실히 실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였다.⁹⁶⁾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한 독자적인 행보와는 달리, 아베정권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한·미·일 3국 간 공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미국 역시 한일 양국의 역사 문제를 극복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중개로 아베 수상은 2014년 3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박근혜

94) 首相官邸, “内閣総理大臣声明(2013.2.12.),” <http://www.kantei.go.jp/jp/96_abe/discource/20130212seimei.html>. (검색일: 2016.9.28.).

95)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편, 『2015 국제정세 전망』, p. 72.

96) “日朝外相会談 再調査先送りを批判・拉致最優先を要請,” 『産経新聞』, 2015.8.6.

대통령과 가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3국 간 공조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베 수상은 “일본과 미국, 한국이 북한 현안에서 긴밀한 공조 체제를 재확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핵, 미사일 이슈, 그리고 남북 간 이산가족 등 인도주의적 현안과 관련해 북한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3국이 협력하여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⁹⁷⁾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한·미·일 공조체제는 아베정권의 수정주의적인 역사관 및 위안부 문제 등으로 인해 그 구축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베 수상은 2015년 8월 14일 전후 70주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는 같은 달 8월 6일에 공개된 ‘20세기를 회상하고 21세기의 세계 질서와 일본의 역할을 구상하기 위한 유식자간담회’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발표된 것이었다.⁹⁸⁾ 당시 ‘아베 담화’는 위안부 문제, 영토 등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경색되어 있던 한일 관계를 일정 부분 개선하는데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담화 내용은 아베정권 출범 이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던 일본의 보수화 움직임에 대한 한국 국내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었다.⁹⁹⁾

그러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회기가 상호 간 타협점을 찾기 시작하면서 2015년 11월 한·중·일 정상회담 시 한일 양국은 단독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같은 해 12월 28일에는 한일외교장관 회담

97) “한미일 헤이그 정상회담…북핵 단합 대응 필수,” 『연합뉴스』, 2014.3.26.,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3/26/0601080100AKR20140326006000071.HTML>>. (검색일: 2016.9.28.).

98) 首相官邸, “20世紀を振り返り21世紀の世界秩序と日本の役割を構想するための有識者懇談会報告書(2015.8.6.),” <http://www.kantei.go.jp/jp/singi/21c_koso/pdf/report.pdf>. (검색일: 2016.9.28.).

99) 首相官邸, “内閣総理大臣談話(2015.8.14.),” <<http://www.kantei.go.jp/jp/topics/2015/150814danwa.pdf>>. (검색일: 2016.9.28.).

을 개최하여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전격 합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여 양국 간 안보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 후 2016년 1월 초 북한이 실시한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한일 양국은 2월 10일, 전화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공조 체제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3월 3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핵안보 정상회의 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3국의 공동 대처 방침을 재확인하였다.

4. 북핵 문제와 한·미·일 협력의 재개

한일 관계와 일본의 대북정책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 비교적 한일 관계가 양호했던 까닭은 고이즈미 방북의 결과 일본의 대북 영향력을 평가하고 일정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독도 문제 등이 원인이 되어 대일강경책으로 돌아선 것은 일본의 대북정책에 더 이상 기대를 가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제1차 아베정권 취임 직후인 2006년 10월 하노이 APEC 정상회의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 아베 수상이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사 인식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으려 했다. 따라서 아베정권에서도 노무현 정부와 관계 강화를 피하는 쪽을 선택했다. 여기에는 제1차 아베정권 시기에 한국 측 파트너가 대북정책 방향성에서 180도 다른 노무현 정부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아베 수상은 제1차 아베정권 시기에 대북 강경 정책을 공통점으로

I
II
III
IV
V
VI

한일 협력을 실현하지 못했다. 하지만 제2차 아베정권은 한국이 보수적인 박근혜 정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북 강경 정책을 둘러싸고 한일 협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즉, 과거사 문제로 인한 마찰을 한국 정부가 억제 및 관리에 성공하고, 대북정책과 대중정책에서 한일협력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였다.

하지만 아베 수상은 정권 출범 이후 역사 수정주의적 인식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베 수상은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2013년 4월 국회 발언)는 입장을 표명한 적도 있고, 2013년 12월에는 중국과 한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단행했다. 이후 과거사 문제,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 극한 대치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일치한 한일 양국 정상은 2015년 11월 양국 정상 취임 후 처음으로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고, 12월에 극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

이러한 가운데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한일 간 역사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양국 간 위협인식의 차이가 한일안보협력의 또 하나의 장애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보는데 반해, 일본의 아베정권은 북핵 문제 이상으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자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사활적인 안보위협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¹⁰⁰⁾ 앞서 언급한 ‘국가안보

¹⁰⁰⁾ Doo-seung Kim, “A Hurdle beyond History: Japan’s Changing Perception of the DPRK Nuclear Threat and Its Impact on Korea-Japan Relation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7, no. 4, December 2015, pp. 479~482.

전략'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한 미일 가이드라인 2015의 책정 목표는 북한보다는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본은 냉전 기간 동안, 그리고 냉전 종결 이후에도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한·미·일 3국 간 공조하에 대처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현재 아베정권의 안보전략 구상에서 한국이 '핵심적 국가(a key player)'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다이아몬드' 안보협력구상, 나아가 ASEAN 중시 전략에서 보듯이 한국과의 안보협력 문제는 일본의 안보전략 구상 내에서 더 이상 최상위에 위치한 핵심이슈가 아닐 수도 있다.¹⁰¹⁾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의 갈등에 더해, 특히 북핵, 중국위협론 등 안보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위협인식의 차이가 한일안보협력의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베정권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중국에 너무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불안감을 자주 나타냈다. 특히 2015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항일전승절 행사에 서방국가 정상 중에 유일하게 참석해서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중국 인민해방군 열병식을 참관했다. 당시 한국 정부의 생각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었지만, 일본 정부는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즉, 비록 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한국이 중국에 접근하는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아베 정부의 대외전략에 배치되는 것이었다.

2016년 들어 제4차 북한 핵실험과 수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동아시아 안보환경이 위협을 받는 가운데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은

¹⁰¹⁾ Michael Green, "Japan is back: Unbundling Abe's Grand Strategy," pp. 13-14.

I
II
III
IV
V
VI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일본은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환영했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부장관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양국 간에 협력이 진전되는 것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와 같은 반응의 배경에는 아베정권이 중국 견제를 외교 정책의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한국의 '중국 경사(傾斜)론'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 또한 아베정권은 사드 배치를 통한 한중 관계 변화(갈등 상황)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¹⁰²⁾

사실 일본은 사드 배치가 자신의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 MD) 체제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등 안보 측면에서 이익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미국의 MD 체계에 통합되어 있고, 특히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에 따라 주한미군 사드에서 포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등 일본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다. 또한 주한미군 사드의 요격 역량은 일본에게 북한 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안보 자산이 될 수 있다. 즉, 현재 일본이 보유한 해상 이지스함 SM3와 지상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과 함께 주한미군 사드라는 미사일 방어 자산이 추가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이미 주일미군 및 자국 방어를 위해 자체 사드 미사일 배치를 계획 중이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일본의 사드 도입에 긍정적인 대국민 설득 요인을 제공한다고 판단하고 있다.¹⁰³⁾

2016년 들어 제4차 북한 핵실험과 수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¹⁰²⁾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KINU 통일나침반 16-05, 2016.8.), p. 9.

¹⁰³⁾ 위의 글, pp. 14~15.

동아시아 안보환경이 위협을 받는 가운데 4월 19일에 열린 한·미·일 차관급협약에서 미국과 일본은 한국에게 미사일 방어를 위한 한·미·일 탄도미사일방어(MD) 합동훈련을 제안했다. 미일은 비공식적으로 3국 협력이 미래 중국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는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다.¹⁰⁴⁾

이에 따라 6월에 ‘2016 환태평양훈련(RIMPAC, 림팩)’에 참가한 한미일 해군 함정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공동으로 탐지하고 추적하는 ‘퍼시픽 드래곤(Pacific Dragon)’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 훈련에서는 사전 경보 없이 육상에서 발사된 탄도탄 가상 표적을 한·미·일 3국 이지스함이 탐지 및 추적하고 미국의 육상중개소를 통해 미사일 궤적 등을 공유했다.¹⁰⁵⁾

전술한 바와 같이 아베정권의 대외적인 안보전략 기조는 ‘미일동맹 강화’와 ‘아시아 외교 전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아시아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중국위협 등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상황에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다. 즉, 아베정권의 대한민국 전략은 일본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아시아 전략 외교’의 관점에 입각해 전개되고 있으며, 대북정책 역시 이러한 기조하에 전개되고 있다.

¹⁰⁴⁾ “ミサイル防衛 日米韓演習へ,” 『朝日新聞』, 2016.5.16.

¹⁰⁵⁾ “‘국제규범 따라야’ 목소리 낮은 한국,” 『동아일보』, 2016.7.14.

V. 아베정권의 대북전략



1. 아베정권의 대북전략 목표

가. 아베정권의 대북전략 기초

일본의 대북전략의 기초는 ‘대화와 압력’으로 상징되지만,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계기로 ‘압력과 제재’ 중심으로 전환되었다.¹⁰⁶⁾ 여기에는 2006년부터 일본이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대북제재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하지만 2012년 아베정권이 발족하면서 일본은 대북 강경 정책을 다시 변화시켰다. 이러한 일본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북한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일본과 북한은 급속히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2014년 5월 말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에 대한 재조사와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의 일부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스톡홀름 합의 이후 ‘대화와 압력’의 대북전략 기초는 다시 돌아왔다.

이와 같이 현재 아베정권의 대북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과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대북 제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북 제재에 관한 일부 해제 조치는 북일 관계에 있어 커다란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게다가 아베정권은 제2차 정권 출범부터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표명해 왔다. 따라서 아베정권의 대북제재 해제와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의 상관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존재한다.

첫째, 아베 수상 자신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점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새로운 보수 정치인으로 성장한 아베는 1998년 북한 대포동 미사일 발사 및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강경한

¹⁰⁶⁾ 배정호, “일본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배정호 외,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 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 82.

I
II
III
IV
V
VI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혀 왔다. 최근 일본의 보수우경화 경향에서 아베 입장에서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국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점을 국내 정치에 홍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치기반인 보수층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인 납치자 피해 가족의 고령화 문제이다. 주로 1970~1980년대에 발생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어느새 납치자 피해 가족들이 80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고령화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일본 여론은 납치자 가족들에 동정적이고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아베 수상 역시 취임하자마자 납치자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의 강경 대응을 탈피해서 대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약속했다.

셋째, 궁극적으로 국교정상화로 대표되는 전후 체제의 완성이다. 아베는 취임 초부터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으로 대표되는 보통국가 일본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과거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는 국가 중에 북한과 유일하게 국교정상화를 이루지 못했으며 보상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따라서 아베가 바라는 보통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북 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그 시발점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인 것이다.¹⁰⁷⁾

나. 대북전략의 국내적 목표

아베 수상은 1990년대 말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기부터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면서 국민적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따라서 아베 개인에게 있어 북한 요인은 1990년대부터 일본 사회가 보수우경화되고 있는

¹⁰⁷⁾ 이기태, “대일본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 pp. 81~82.

상황에서 국내적 정치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베정권의 대북전략의 국내적 목표를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아베정권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정치화를 통해 국내 보수파의 내부 결집을 도모하고 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 앞서 얘기했듯이 일본 사회에서 북한은 중국 위협과 더불어 일본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요소이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에게 북한이라는 국가는 방송매체 등을 통해 비정상적이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매우 위험한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일본 영토 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영토 주권을 침해한 사건이며, '영토'라는 민족주의적 요소와 관련되면서 일본 국민들의 자존심을 손상시킨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베정권은 이러한 부당하고 부정확한 국가인 북한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특히 일본 국내 보수파의 결집을 통해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2015년 안보법제 강행 통과 이후 아베정권의 지지율은 50% 이하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정권의 대북전략은 국내 지지율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전개될 수 있다.

둘째, 북한 위협을 이용해 안보전략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안보 법제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참의원 선거 이후 헌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일본에 있어 가장 큰 안보적 위협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질서의 변동 가능성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일본 안보전략의 중요한 요소는 대북 위협에 대한 대응이다. 지난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을 통해 일본 정부는 과거의 수동적이었던 안보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안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에 성립된 안보법제는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하에 전개된 아베정권의 안보전략이 실행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했다고 평가된다. 앞으로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은 일본이 안보법제를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넘어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하는 헌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 대북전략의 국외적 목표

아베 수상이 제2차 정권을 잡았을 때는 제1차 정권 시기와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을 둘러싼 정세가 변화를 겪었다. 그 중에서도 2010년 중국과 관련해서 일어난 2가지 큰 사건이 일본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첫째는 경제성장 이후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일본의 자부심이 2010년에 중국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면서 무너졌던 것이다. 둘째는 2010년 센카쿠 열도에서 발생한 중국어선과 일본 해양경비선 충돌사건이었다.

이와 같이 중국에 의한 위협이 증대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시험 등이 계속되면서 일본 사회는 대외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아베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북전략의 국외적 목표를 갖고 있다.

첫째,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제거하고자 한다. 일본은 냉전 기간 중에 미일 동맹의 보호 아래에서 평화국가로서 다른 국가로부터 안보 위협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1998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일본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안보 위협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계속된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는 북한 체제의 특이성과 함께 북한에 대한 막연하지만 두려운 안보 위협을 일본 국민들에게

안겨주었다. 따라서 아베정권에게 있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반드시 막아야 할 안보 위협으로 인식되며,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당연히 그 안보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제1차적 목표로 삼고 있다.

둘째, 영토 분쟁에 의한 중일 갈등 및 과거사 문제로 경색된 한일 관계와 그로 인한 한·중·일 관계에서의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한다. 일본은 미일 관계 강화와 더불어 대아시아 외교도 증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이웃한 국가인 한국, 중국과 갈등 관계에 빠지면서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외교적 고립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역시 외교적 고립에 빠져 있는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대남 및 대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져있을 시기에 일본과의 교섭을 통해 외교적 출구를 모색하려 할 것이다. 또한 비공식적으로 중국 주변국들과의 우호 관계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일본의 전략적 사고에서는 북한도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하나의 협력국으로 발전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셋째,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역할 확대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즉, 유엔 외교의 강화이다. 특히 아베정권은 국제공헌 확대를 통한 보통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국제공헌 확대는 크게 미일동맹 강화와 유엔 외교 강화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아베정권 입장에서는 2016년 유엔 가입 60주년을 맞이하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이라는 상징성도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아베정권의 대북전략은 다양한 국내외적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이러한 국내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경한 대북전략의 입장을 갖고 있던 아베 수상이 제2차 아베정권에서 보다 융화적인 방향으로의 전략적 전환이 있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 아베정권의 ‘대화와 압력’ 대북전략

가. 대북 강경 노선에서 융화 전략으로

제2차 아베정권은 기존의 대북 강경 노선을 융화적인 정책으로 변화시키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대북 강경 노선은 결과적으로 납치 문제 해결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게는 대북 외교 카드가 없다고 하는 현실이 제2차 아베정권이 대북전략을 대폭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아베정권은 강경일변도의 대북전략에서 벗어나 2002년 고이즈미 수상이 말했던 ‘대화과 압력’이라는 대북전략으로 복귀했다.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 2013년 5월 14일,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내각관방참여(參與)¹⁰⁸가 돌연 북한을 방문한 것이었고, 이는 일본이 북일 관계를 개선시켜 보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었다.

일본은 2002년 고이즈미 수상의 방북으로 일시적으로 북일 국교정상화를 추진했지만 납치 문제가 예상외로 심각했기 때문에 일본 국내적으로는 ‘선 납치 문제 해결, 후 북일 국교정상화’라는 노선을 채택해서 2012년까지 이 노선을 기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았다. 그동안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했고, 일본의 대북 강경책은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향후 대북 관계를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해 아베 자신이 정책 변화를 받아들였다.

2012년 12월에 다시 정권을 잡은 아베 수상은 기존 북한 핵문제 해결과 동시에 납치 문제도 해결한다는 노선을 기본적으로 견지하면서 납치 문제 해결 전에 가능하다면 먼저 북일 국교정상화를 실현시키는 방향도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2013년 5월에 있었던 이지마의

¹⁰⁸ 참여(參與)는 수상(내각수상대신)의 자문역 혹은 특보, 고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방북에서 보였던 내용이며, 이는 아베정권 이후의 북한 접근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해도 일본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정비하려고 힘을 쏟았던 배경에는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즉,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전제조건이 “동해에서 미군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으며 주로 북한을 적국으로 가정한 내용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앞서 대북전략의 국내적 목표에서도 언급했듯이 가장 중요한 대북 외교 과제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강경일변도의 대북전략으로서 심지어 적기지 공격론과 함께 특수부대 파견을 통한 일본인 납치자의 구출 작전까지 언급되는 상황이었다. 물론 현행 일본 헌법상 이러한 언급은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북한을 비이성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국가로 규정하는 일본 정부와 여론들 사이에서는 빈번히 표출되는 불만사항이었다.

그리고 아베 수상은 수상관저 내에 설치한 국가안보국의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국장을 통해 ‘전략적 사고’에 기반한 대북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대북강경파로 알려진 야치는 아베 수상의 외교 책사로 알려져 있으며,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 의한 대북 압박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으로 아베 수상은 제2차 아베정권의 외교수장으로 온건파인 기시다를 기용함으로써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노선의 한 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베 수상은 대북전략의 ‘대화와 압력’이라는 융화적 전략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관저 주도의 대북강경파 야치 국가안보국장과 외무성 주도 대화 노선의 기시다 외상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추진하고 있다.

I
II
III
IV
V
VI

이에 아베정권의 대화 전략과 압력 전략이 융화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북전략을 각 전략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북핵 문제를 바탕으로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나. 대화 전략: 일본인 납치자 문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는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발생했다. 이후 일본인 납치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던 북한이 납치를 정식으로 인정한 것은 2002년 9월 고이즈미 수상 방북 시 열린 제1차 북일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명 생존, 8명 사망, 1명 미입경’을 통지한 것이 처음이었다.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아베 수상은 시정방침 연설에서 “북한에 대화와 압력의 방침을 관철시키고, 모든 납치 피해자의 안전 확보 및 즉시 귀국, 납치에 관한 진상 규명, 납치 실행범의 인도 등 3가지 사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결의를 표명했다.¹⁰⁹⁾

일본 정부는 북한에서 귀국한 5명을 포함해서 17명, 이외에도 일본 경찰 당국이 납치 의혹을 갖고 조사 중에 있는 수많은 사례(886명)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일본의 주권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인 동시에 납치된 사람들의 귀중한 미래, 수많은 꿈을 단절시키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파괴시키는 등 인권, 인도적 문제이다. 또한 피해자가 북한에 억류된 상태에서 40년 가까이 지난 가운데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은 고령화되고 있다. 다시 재회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피해자 가족도 존재한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 구출을 서두르고 있다.

¹⁰⁹⁾ 일본국 제183회 국회 참의원본회의록 제8호, 2013.2.28., p. 3.

이러한 인식 아래 아베 정부는 납치 문제를 정부 인정과 상관없이 ‘대화와 압력’,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가지고 정부 책임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최우선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아베정권은 대외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설정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단순한 납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통 이슈로 공유하는 문제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와 관련해서 2014년 2월에 발표된 ‘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그 중대성, 규모, 성질은 현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표현된 북한 인권 침해의 한 형태로 지칭했다. 일본인 납치 문제는 COI 보고서의 ‘외국으로부터의 납치 및 강제실종’ 항목에서 한국과 기타 국가들에서 발생했던 납치 및 강제실종으로 명기되어 있고, ‘인도에 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압력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으로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도 나서고 있다. 북한은 2008년 일본에 납치 피해자의 생존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약속했지만 이후 일방적으로 파기해 4년간 일본과 북한의 협의가 중단됐다. 이와 같은 북일 간 협의 중단 상태가 지속되어 오다가, 북한과 일본은 2011년 8월 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과장급 회담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고위급 회담을 열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2012년 11월 15~16일 이틀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4년 만에 북일 정부 간 협의가 개최되었다. 이 협의에서 일본 외무성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송일호 북일 교섭

I
II
III
IV
V
VI

담당대사가 만나 북일 국장급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스기야마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양측이 납치 문제도 포함해 협의를 계속하자는데 일치했다”고 말했다. 즉, 향후 회담에서 북한 측이 납치자 문제의 의제화에 동의했으며, 이는 “납치자 문제는 이미 해결이 끝났다”는 북한 측의 종전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이라고 해석되었다. 또한 이 회담은 일본이 대화외교의 틀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즉,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의 관심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으로써 4년 간 계속된 북일 교착을 타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국내정치적으로 당시 노다 정권은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략 차원에서 납치자 문제 해결에 진전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12월로 예정되었던 협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예고를 받고 연기되었다.

한편, 아베는 11월 21일 납치자 가족들과 만났다. ‘납치피해자가족회’는 납치 문제의 조기해결을 요구했고, 아베는 12·16 총선에서 정권을 되찾으면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해서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표명했다. 제2차 아베 내각의 발족 후인 2013년 1월에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및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납치문제대책본부가 내각에 설치되었다.

2013년 8월, 북한은 한국과 남북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는 등 대화 자세를 표시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김정은 제1서기가 중국 국가부주석에게 도발행위를 자제하겠다는 생각을 전달했다고 보도되는 등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의 실마리를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였다.¹¹⁰⁾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 입장은 ‘해결 완료’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¹¹⁰⁾ “北朝鮮: 北東アジアで危険起きぬ 正恩氏, 挑発自制伝える 中国に配慮,” 『毎日新聞』, 2013.8.27(夕刊).

서는 납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또한 납치 문제에 대해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정권보다 책임이 가볍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아버지와 달리 직접 납치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2년 북일정상회담에서 납치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또한 2008년 6월과 8월에 후쿠다 야스오 정권과 일본이 요구하는 납치 피해자의 재조사 형식 및 방법에 따라 북한이 재조사를 시작하면,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제한다는 약속이 ‘북일 실무자 협의안’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2013년 5월 14일 아베 수상의 특사 자격으로 이지마 특명담당 내각관방참여가 북한을 방문했다. 그리고 2013년 가을, 북한 관계자가 북경의 외교루트를 통해 일본 측에 접촉해서 북일 양 정부는 수면 아래에서 교섭을 시작했다. 이 때 일본 외무성은 납치피해자 요코타 메구미의 부모와 메구미의 딸 김은경과의 면회를 몽골에서 진행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면회는 2014년 3월 10일에 실현되었고, 이를 계기로 북한과 일본 외무성 사이에서는 정부 간 협의 재개가 모색되기 시작하였고, 아베 수상은 북한이 대화 의사가 있다고 받아들였다.

이와 같이 북한과 일본은 2012년 11월 이후 중단되었던 정부 간 협의 재개에 합의했다. 이미 3월 19일 중국 심양에서 북일 적십자회담이 개최되어 일본인 유골 반환 및 일본인의 북한 현지 성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배경으로 3월 20일에 국장급 협의가 재개되어 북일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합의했다.

북한이 김정일 시대에 해결되었다고 주장한 납치 문제의 재조사를 수락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강국 건설에 필요한 외부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한·미·일 연대에 의한 대북 압박정책을 균열시켜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에서

I
II
III
IV
V
VI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에 대해 일본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아베정권이 북한과의 협상에 응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아베 수상이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걸고 있는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협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을 높여 헌법 개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마지막으로 북한 카드를 이용해 중국의 동해로의 해상진출노선을 봉쇄하고,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동시에 당시 역사 및 영토 문제로 관계가 경색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서였다. 중국 견제라는 면에서 북한과 일본의 이해가 어느 정도 일치된 것이다.

북일 양국은 2014년 5월 26~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일본인 납치자’ 재조사에 합의하고, 일본은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5·28 합의). 즉, 북한은 2002년 9월, 평양선언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과를 통해 “(납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일본 정부가 파악한 공식 납치 피해자 17명에 대한 재조사뿐만 아니라 납치의혹 행방불명자 860여 명에 대한 재조사에 합의하였다.

합의문에는 2003년 ‘북일 평양선언’과 2008년 북일 실무협회의 주요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한마디로 말해, 북한의 ‘납치 문제 해결’과 일본의 ‘과거사 청산과 국교정상화’라는 빅딜을 제시하고 있었다.

북한은 7월 1일, 5·28 합의에 따른 첫 조치로 국가안전보위부가 이끄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일본은 이에 대한 대가로 7월 4일, 2006년 7월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와 10월 1차 핵실험 이후 실시해온 독자제재의 일부 해제를 각의 결정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도쿄에 위치한 조총련 중앙본부의 매각 유보 및 사용권 확보를 인정했다.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온 북한에 대해 한·

미·일 연대 강화의 중요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북일 간의 합의 및 제재 일부 해제에 관해 수많은 논의가 전개되었다. 즉, 한국과 미국에서는 남북대화가 정체되고 핵문제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북한과 일본의 급격한 접근을 우려하는 소리가 나왔다.

그동안 일본은 2006년 10월 제1차 북핵실험, 2009년 5월 제2차 북핵실험,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2013년 2월 제3차 북핵실험 등을 거치면서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강화해 왔다. 그 내용은 모든 북한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산 상품의 수입 전면 금지, 북한 정부 관계자에 한정되었던 입국 금지조치의 민간인으로서의 확대, 조총련의 대북송금 대폭 축소 등이었다.¹¹¹⁾

표 V-1 ▶ 북일 스톡홀름 합의 내용

일본	북한
대북 독자제재 해제: 인적왕래, 송금, 휴대 금액신고 규제 해제,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적 선박 일본 입항금지 해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일본인 납치 피해자, 행방불명자, 유골 및 묘지, 잔류 일본인 배우자 등에 대한 포괄적 전면적 재조사
대북 인도주의 지원 검토	일본인 생존자가 발견되면 귀국 조치, 조사 과정에서 관계자 면담 허용
양국: 북일평양선언에 따라 국교정상화 실현 의사를 다시 밝히고 관계 개선	

출처: 外務省, “岸田外務大臣会見記録(2014.5.30.)” <http://www.mofa.go.jp/mofaj/press/kaiken/kaiken4_000087.html#topic1>. (검색일: 2016.9.28.)에 의거하여 필자가 작성.

이러한 스톡홀름 합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북한은 ‘친중파’ 장성택 처형 이후 중국과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에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한 출구를 모색하였고, 한·미·일 3각 동맹의 균열 조장도

¹¹¹⁾ 전현준, “북·일관계, 순풍 기대할 수 있을까?,” 『통일한국』, 통권 367호 (2014년 7월), p. 24.

I
II
III
IV
V
VI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아베 수상은 일본이 한국 및 중국과 역사 문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내적으로는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위한 국내지지 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다. 대북 강경파인 사이키 아키타카가 2013년 6월 외무차관으로 임명되어 협상을 주도하였는데 사이키는 고이즈미 시절 관방 부장관이던 아베 수상과 대북 강경책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북일 양국의 생각의 차이가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가 최우선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북한 정부는 일본이 배우자와 유골 문제를 우선하는 의향을 나타냈다. 당초 같은 해 9월에 첫 보고서를 낼 예정이었지만, 북한은 9월에 조사는 1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보고의 연기를 통고했다. 양측은 중국의 대련과 상해 등에서 비공식협의를 계속했지만, 2015년 7월에 북한은 다시 회담 연기를 통고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납치 관련 단체와 납치대책본부를 중심으로 ‘5·28 합의’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북일 협상이 정체된 데는 이유가 있다. 먼저 북한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감이 크다. 일본 측은 북한이 재조사를 내세워 제재 해제와 지원을 얻었으며, 더 나아가 과거사 청산과 국교정상화까지 노리고 있다고 인식했다. 북한 측은 납치 피해자의 생존을 발표하더라도 혹은 사망이나 입국 사실이 없다고 발표하더라도 일본 여론이 북한에게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납치 문제만 해결되면 과거사 청산과 국교를 정상화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과 일본 둘 다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었다.¹¹²⁾

¹¹²⁾ 히라이 히사시, “아베 정부의 대북정책: 기회와 정체-시련에 직면한 ‘스톡홀름 합의,’”

다음으로 '5·28 합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납치 문제 해결과 관련해 양국 간에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 즉,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채로 양측이 재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특별 조사위원회 조사가 납치 문제뿐만 아니라 특정 실종자 등 행방불명자, 일본인 유골, 잔류 일본인과 그 배우자 등 북한의 일본인 문제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반면 일본 측은 납치 문제의 우선 조사를 요구하고 있었다.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따라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함께 2월 10일 일본의 독자 제재 조치가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2월 12일 일본인 납치 피해자 등의 조사를 전면 중지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발표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밝혔다.

현재로서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향후 일본 정부가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물밑 접촉을 통한 해결책을 논의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다. 압력 전략: 북핵 문제

2006년 10월 1차 북핵실험 이후 북한의 다양한 대일 위협 요소들로 인해 북일 관계는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다. 또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6차에 걸쳐 열린 6자회담에서 일본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동시에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를 북일 간에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향은 제1차 아베 정부가 발족한 후에도

『한반도 포커스』, 제31호 (2015년 봄), pp. 22~23.

보다 선명하게 드러났다. 당시는 아베 수상 자신이 대북 강경론을 주도했고, 납치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2007년 제6차 6자회담시 발생한 북한 자금 동결 문제로 인해 사실상 6자회담이 중단되었다. 또한 북한은 김정은 제1서기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 이행을 거치면서 2012년 4월과 12월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고, 2013년 2월에는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도발적인 행동을 반복했다.

일본은 북한이 실전 배치한 노동 미사일의 사정권 내에 들어가고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한다면 일본 열도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갈 것이라는 위협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것은 일본 안보상 최대의 위협 요소였다.

아베 수상은 2013년 시정방침 연설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명확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엄중히 항의하고 비난한다.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미국, 한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등 관계국과 연계하여 단호한 대응을 추구한다.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는 자세를 보였다.¹¹³⁾

이러한 기초하에 그동안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에 입각한 대북제재에 더해, <표 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으로부터의 일본 재입국 금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가동해 왔다.

¹¹³⁾ 일본국 제183회 국회 참의원본회의록 제8호, 2013.2.28., p. 3.

표 V-2 >>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일본의 대북제재 조치 현황

구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2094호)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제3차 핵실험 (201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금융자산의 이동 및 금융 서비스의 제공 금지 •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개인/단체 또는 이들 지시하에 활동하는 북한 외교관 추방 • 북한 출입선박에 대북금수 물품의 적재 정보가 있는 경우, 화물검사 <의무화> (과거 <요청>) 	<p style="text-align: center;">비 군 사 적 대 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으로부터의 일본 재입국 금지 대상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이후: 조총련 간부 4명 재입국 금지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겸직) - 조총련 당국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총련 직원의 일본 재입국 금지 • 일본 금융기관과 북한의 대외무역결제은행(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 금지
		<p style="text-align: center;">안 보 군 사 적 대 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 제고 주력 • 북핵위협 억제 차원의 MD체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정고도 제약 극복을 위해 미국과 SM-3 블럭 IIA 개발 공동연구 추진 - 북핵위협에 PAC-3(16개 고사대 운용: 1개 고사대 당 5기 발사대)를 활용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어 범위 한계(1개 고사대의 방어 범위 수십 km 정도)

출처: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 동아시아 전략평가』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 p. 182.

한편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아베 정부는 대북 경제제재와 같은 비군사적인 대응조치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안보군사 차원의 대응태세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아베 정부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안보군사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미사일 방어(MD)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아베 정부는 탄도미사일의 요격 능력을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현재 일본 국내에서는 미사일 방어체제 만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관점에

I
II
III
IV
V
VI

서 ‘적기지 공격능력’ 구축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¹¹⁴⁾

이상과 같이 북한의 3차에 걸친 핵실험에 대해 아베 정부는 유엔 차원, 독자적인 대북경제 제재에 더해 안보군사적인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일견 일본 정부의 대북정책이 ‘압력 일변도’로 수렴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베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대화와 압력’이라는 정책 기조하에 추진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6자회담은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개최되고 있지 않다. 북한은 무조건 재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긴장 완화의 목적도 있고, 협상은 하지 않은 채 대화에는 응한다는 자세를 암시하고 있다. 중국이 북미 접촉을 증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베 정부의 ‘대화와 압력’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른 대북전략은 현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틀인 6자회담이 기능부전 상태에서부터 탈피하여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전략 개념이다. 문제는 최근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적 행보에 더해, 2013년 11월 23일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으로 인해 미중 관계, 나아가 중일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¹¹⁵⁾ 한일 관계 역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6자회담이 개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처럼 6자회담 재가동

114) 外務省, “日米安全保障協議委員會共同発表——より力強い同盟とより大きな責任の共有に向けて(2013.10.13.),” <<http://www.mofa.go.jp/mofaj/files/000016026.pdf>>. (검색일: 2016.9.28.). 미일 2+2회의에서 미일 양국은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문제에 대해 미일 양국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15) “中国領空のような表示, 受け入れられない…首相,” 『読売新聞』, 2013.11.25.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을 가정할 경우,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 아베 정부의 대북정책은 적어도 당분간은 '대화와 타협 보다는 압력' 중시의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월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이 있었다. 그리고 일본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차원의 국제사회의 제재 및 한·미·일 독자제재 발동에 의한 대북 압박전략에 동참하였다. 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결의 2270호를 발동하였고, 미국은 세컨더리보이콧, 방코 델타아시아식 제재를 추진하였으며, 한국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아베정권은 스톡홀름 합의 때 일부 해제한 제재들을 대부분 원상회복시켰다. 그 내용으로는 북한 국적자의 입국금지,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들의 북한 방문 후 재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에 따른 10만 엔 이하 금액을 제외한 대북 송금의 원칙적 금지, 조총련 간부들의 일본 재입국 금지 등이다.

즉, 일본 외무성은 일본이 북한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준수를 요구하면서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반복해서 강력히 요구해 왔다. 또한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아베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하루 빨리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국제 사회의 제지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이어서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일본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일본은 납치, 핵, 미사일 등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

I
II
III
IV
V
VI

엇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가라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온 결과, 다음의 독자적인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¹¹⁶⁾ 첫째, 인적 왕래의 규제 조치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

(1) 북한 국적자의 입국 원칙 금지, (2) 재일 북한 당국 직원 및 해당 직원이 할 기관 직원으로서의 활동을 보좌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의 북한을 목적지로 한 재입국 원칙 금지(대상자를 기존보다 확대), (3) 북한 도항 자숙 요청, (4) 일본 국가공무원의 북한 도항 원칙 보류, (5) 북한 국적 선박의 승무원 등의 상륙 원칙 금지, (6) '대북 무역·금융 조치에 위반 형이 확정된 외국인 선원의 상륙' 및 '그러한 형이 확정된 재일외국인의 북한을 목적지로 한 재입국' 원칙 금지, (7) 재일외국인인 핵·미사일 기술자의 북한을 목적지로 한 재입국 금지.

둘째, 북한을 목적지로 하는 지불 수단 등의 휴대 수출 신고의 하한 금액을 '100만 엔 초과'에서 '10만 엔 초과'로 인하하고, 인도적 목적 혹은 10만엔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북 지불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셋째, 인도적 목적의 선박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북한에 기항한 제3국 국적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다.

넷째, 자산 동결 대상이 되는 관련 단체·개인을 확대한다.

일본은 '대화과 압력', '행동 대 행동'이라는 일관된 방침하에 납치, 핵, 미사일과 같은 여러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향한 북한의 전향적인 움직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으로 일본은 가장 중요한 과제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북한은 일본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에 강경

¹¹⁶⁾ 外務省, “我が国独自の対北朝鮮措置について(2016.2.10.),” <http://www.mofa.go.jp/mofaj/a_o/na/kp/page4_001766.html>. (검색일: 2016.9.28.).

한 자세로 대응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은 일본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즉, 76%가 대북제재 강화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로 응답하였고, 14%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¹¹⁷⁾

한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014년 5월 스톡홀름 합의를 파기할 생각은 없으며,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특히 외무성도 ‘납치, 핵, 미사일과 같은 여러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밝혔는데 아베정권은 표면적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 및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결’을 위해 표면상으로는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을 추구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독자적인 대북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대북전략의 실제: 대북 압력의 지속

가. 대북전략의 변수

이렇게 아베정권이 대북전략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존의 대북 강경 전략에서 ‘대화과 압력’이라는 융화적 전략으로 회귀한 가운데 향후 아베정권의 대북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북미 관계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북미 관계가 개선될 때 북일 관계도 호전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통적으로 일본 외교는 ‘반응(reactive) 외교’로 불려진다. 즉, 미국에 안보를 맡겼던 ‘요시다 노선’ 이후 일본 외교는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반응하는 형태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고이즈미 방북이나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흔히 ‘오일 외교’로 불리는 독자적인 외교 행태는 나타났지만, 대체로 일본

¹¹⁷⁾ “北制裁強化「評価」76%、「効果ある」31%.” 『読売新聞』, 2016.2.15.

I
II
III
IV
V
VI

외교는 미국에 대한 반응 외교였다. 따라서 일본의 반응 외교 측면에서 북미 관계의 개선은 북일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일본의 미국을 배제한 독자적인 대북 외교의 실패는 이미 1990년대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북미 관계 개선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문제의 완화와 연결되며, 이는 일본의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접근에 있어 긍정적 여건을 조성시킨다.

둘째, 일본인 납치자 문제이다. 아베정권은 국내적으로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대북전략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베 수상의 정치적 정체성(identity) 및 지지 기반을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다. 아베 수상은 2000년대 초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면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였다. 즉, 1997년 ‘납치 피해자 가족모임’ 출범에 관여하였고, 2002년에는 관방 부장관으로 고이즈미 수상의 평양 방문을 동행하였다. 그리고 2006년 제1차 아베정권시 ‘납치문제 대책본부’ 설치를 주도하였다. 따라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은 아베 수상의 지지기반 유지와 직접 연결된다.

그리고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일본 국민의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 순위를 반영하고 있다. 가장 최근 일본 국민들의 북한 문제에 대한 일본 내각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본인 납치자 문제’(83.5%)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이 ‘핵문제’(76.1%), ‘미사일 문제’(60.5%) 순이었다. 이는 일본 국내정치에 있어 대북전략의 우선 순위가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정당화시킨다.¹¹⁸⁾

셋째, 북핵 문제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일본 안보에 있어

¹¹⁸⁾ 内閣府, “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2016.1.),” <<http://survey.gov-online.go.jp/h27/h27-gaiko/2-1.html>>. (검색일: 2016.9.28.).

직접적인 위협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이러한 안보 위협의 제거를 위해 미국 및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대북 압박전략에 있어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일본은 안보적 측면에서 북핵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안정이다. 세계 유일의 원자폭탄 피폭국으로서 일본은 ‘비핵 3원칙’¹¹⁹⁾과 같이 핵무장을 할 수 없고, 앞으로도 당분간 핵알레르기가 강한 일본 정서를 감안할 때 핵무장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면서 북핵 문제에 국제사회와 함께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아베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정책에 동의를 표시하고 있지만, ‘핵무기 철폐’와 같은 근본적인 핵문제 해결에는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다는 현실적이고 안보적 판단에서 적극적인 동참을 하지 않고 있다.

나. 아베 정부 대북전략의 실제

아베정권은 공식적으로 “납치, 핵, 미사일을 둘러싼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추구”(일본 외무성)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아베정권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대북전략에 있어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며, 대북 강경책과 유화책 사이를 오가고 있다. 국내정치적 측면에서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통한 유화책을 사용해야 하지만, 동시에 대외정치적 측면에서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북핵 및 미사일 위협의 해결을 위해 대북제재 동참을 통한 강경책을 사용해야 하는 딜레마에

¹¹⁹⁾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당시 수상이 천명한 것으로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내용이다.

I
II
III
IV
V
VI

빠져 있다.

따라서 아베정권은 미국, 한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납치, 핵, 미사일 문제의 '포괄적 해결'이라는 입장에서 대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현재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대북 압력에 의한 강경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아베정권의 대북 강경 전략에 대해 서술한다.

(1) 독자적 대북 제재

북한은 2013년 2월 12일에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이에 대해 아베 수상은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며, 동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¹²⁰⁾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해 3월 8일에 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채택했다. 안보리 결의안 2094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 조치를 발동하였다. 첫째,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 및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 둘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개인 및 단체 또는 이들 지시하에 활동하는 북한 외교관의 추방, 셋째, 북한 출입선박의 금수 물품 적재 정보가 있는 경우에 화물검사 '의무화(과거 요청)'가 그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조치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실시하였다. 먼저, 북한에서 재입국하는 금지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일본 정부는 조총련

¹²⁰⁾ 首相官邸, “内閣総理大臣声明(2013.2.12).”

간부 4명(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겸직)에 대해 일본 재입국을 금지해왔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을 계기로 아베정권은 조총련 간부 재입국 금지 조치를 강화하였고, 조총련 당국의 활동을 지원하는 직원의 일본 재입국을 금지하였다. 또한 일본 금융기관과 북한의 대외무역 결제은행인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정책을 결정했다.¹²¹⁾

아베정권은 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 이후 인적 왕래의 규제 강화와 송금의 원칙 금지 등이 포함된 독자 제재를 실시했다.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를 이유로 2014년에 완화했던 제재를 모두 부활시키면서 한 외무성 간부는 새로운 제재도 포함한 ‘세계에서 제일 엄격한 제재’라고 말했다. 또한 아베 수상은 2016년 9월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 수상관저를 방문한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 자민당 납치문제대책본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위협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지금까지보다 더욱 제재를 강화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¹²²⁾

하지만 일본의 독자 제재 실시에는 한계도 따른다. 사실 추가 제재는 일본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일 뿐 실제 효과는 없다는 아베정권 내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아베 수상 주변에서는 “효과 있는 제재 카드는 이미 써버렸다. 새로운 독자 제재는 효과보다도 일본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실상 아베정권이 기대하는 것은 이러한 일본의 자세를 나타냄으로써 국제 사회에 의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압도적인 교역량을 자랑하는 중국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 제재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이다.

¹²¹⁾ Doo-seung Kim, “A Hurdle beyond History: Japan’s Changing Perception of the DPRK Nuclear Threat and Its Impact on Korea-Japan Relations,” pp. 475~479.

¹²²⁾ “独自制裁に限界も,” 『朝日新聞』, 2016.9.21.

I
II
III
IV
V
VI

즉,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게 구속력을 가진 결의를 유일하게 낼 수 있는 안보리가 물자와 연료 공급, 수입원을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¹²³⁾

(2) 북한 핵위협에 대한 안보군사적 대응 전략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안보군사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미사일 방어(MD) 체제를 강화해왔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아베 정권은 탄도미사일의 요격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스탠더스 미사일(SM-3)의 사정고도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SM-3 블럭 II 개발에 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함과 동시에, 패트리엇 미사일(PAC-3, 16개 고사대 운용: 1개 고사대 당 5기 발사대)의 방어 범위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주력하였다. PAC-3 부대의 1개 고사대의 방어 범위가 수십 km 정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대도시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PAC-3의 방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6년 제4차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허용하면서 아베정권 역시 새로운 탄도미사일방어체제(MD 체제)의 확충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는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요격미사일 SM-3와 지대공유도탄 PAC-3의 2단계로 요격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미군의 지상배치형 이지스 시스템과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 시스템

¹²³⁾ “対北朝鮮 国連でアピール,” 『朝日新聞』, 2016.9.23.

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는 미사일 방어체제 만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관점에서 적기지 공격능력 구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¹²⁴⁾ 2013년 2월 14일, 당시 자민당 간사장이었던 이시바 시게루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안보군사적 대응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자위대가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¹²⁵⁾ 또한 자민당도 자체적으로 작성한 방위대강 개정안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¹²⁶⁾

과거 적기지 공격론은 일본 평화헌법하에서 지켜져온 ‘전수방위원칙’에 따라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었지만, 최근 집단적 자위권 개정 및 평화안전법제 성립 이후 일본 내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위한 검토에 들어가는 등 과거보다는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4. 아베정권의 대북전략 전망

아베정권의 대북전략의 두 가지 목표는 ‘납치 문제 해결’과 ‘북한

¹²⁴⁾ 미일 양국은 미사일 방어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 4월 29일에 있었던 미일국방장관 회담에서 미사일 추적용 고성능 레이더인 X밴드 레이더(TPY-2)를 교토부(京都府) 교탄고시(京丹後市) 교가미사키(経ヶ岬) 기지에 배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은 2006년, 아오모리현 쓰가루시(津軽市)의 항공자위대 기지에 X밴드 레이더를 배치하여 운용해오고 있는데, 북한 미사일의 조기 탐지를 위해 교토에 X밴드 레이더를 추가 배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X밴드 레이더는 반경 4000km 이내의 탄도 미사일 형태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탐지능력이 뛰어난 미사일 방어 체제의 핵심 장비이다(防衛省, “日米防衛相会談の概要(2013.4.29),” <http://www.mod.go.jp/j/press/youjin/2013/04/29_gaiyou.html>. (검색일: 2016.9.28.); “配備へ前進残る不安: 米軍レーダー,” 『読売新聞』, 2013.7.12.).

¹²⁵⁾ “敵基地攻撃能力早急に検討を……石破幹事長,” 『読売新聞』, 2013.2.15.

¹²⁶⁾ “自衛隊の機動力強化, 原発警護を明示 新防衛大綱の自民党案判明,” 『産経新聞』, 2013.4.23.; “過度の抑止見直し安部カラー前面に,” 『産経新聞』, 2013.4.23.

I
II
III
IV
V
VI

핵·미사일 위협의 억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의 상이성(납치 문제에 있어 대화 vs. 북핵 문제에 있어 압력)은 아베정권의 대북전략에 대한 일관성을 의심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대북 압박전략에 있어서의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국내정치적 역학관계(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 및 아베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 확보 문제)는 아베정권이 납치 문제 해결을 대북전략에 있어 최우선 순위로 둘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따라서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교섭은 북핵 문제의 진전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아베정권은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교섭을 간헐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북일 관계의 진전과 경색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일본보다는 북한에 달려있다. 즉,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의 이니셔티브도 해결을 위한 노력도 모두 북한 측의 노력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이 납치자 문제에 대해 일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제공할 가능성은 적다. 북한은 납치자 문제를 가지고 일본을 국교정상화 회담까지 끌어들이고, 회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

일본의 납치자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이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 압박 공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영향력의 한계이다. 또한 납치자 문제 해결 노력으로 인한 북일 관계 진전이 남북 관계의 진전에 긍정적 도움을 가져올 가능성 또한 크지 않다.

과거부터 일본이 대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세 및 주변 이해당사국과의 관계가 중요했다. 1990년대 가네마루(金丸信) 방북단

의 회담 결과 개시된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도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둘러싼 미국의 견제와 북일 교섭과정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한국과의 갈등 속에 실패로 끝난 적이 있었다. 또한 민주당 정권하에서도 납치자 문제와 같은 국내요인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북미 관계, 남북 관계의 교착상태 및 영토 문제를 둘러싼 한일, 중일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일본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변국의 도움을 얻지 못했다.

또한 대한전략과 달리 대북전략은 일본 국내정치역학의 변화에 그다지 큰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북한 문제 해결에는 주변국의 협력이 필수라는 측면에서 일본 정부는 본격적인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 및 핵개발 저지를 위해서 한일 관계, 중일 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VI. 결론



아베정권은 출범 이후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피’와 ‘전략 외교의 추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전후 일본의 억제적인 안보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헌법과 같은 각종 제도적 장치를 수정·강화하는 동시에 미일동맹 강화 및 방위력 증강 등 일련의 공세적인 안보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아베정권의 대외적인 안보전략의 핵심 기조는 강력한 미일동맹 체제의 구축과 한국, 호주, ASEAN 등과의 안보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 대아시아 전략 외교의 전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아베정권의 미일동맹 강화 전략과 관련하여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동 전략이 일본의 중장기 안보전략 관점에서 볼 때 ‘보통국가 일본’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과도기적 ‘프로세스’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아베정권은 일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중시하면서도, 미국의 상대적인 국력 약화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안보환경에 대처 가능한 일본의 독자적인 방위력 증강 필요성 또한 중시해 왔다. 아베정권은 대중국 견제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유지 목표하에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 전략에 대해 일본의 역할 분담을 확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결정, 미일 가이드라인 2015 책정과 평화안전법제의 정비, 방위예산 증액 등 적극적인 방위력 증강 정책은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된 것이다. 아베정권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방위력 증강)이 상대적인 국력 쇠퇴가 논의되고 있는 미국을 지원하고, 또한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대등한 미일동맹 관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이며, 이러한 관계형성은 궁극적으로는 안보정책에 관한 주권국가 일본의 국가이익을 독자적으로 판단하는데 중요한 상황적 조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베정권의 미일동맹 강화 전략은 ‘보통국가

I
II
III
IV
V
VI

일본'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략적 판단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베정권의 대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는 ASEAN, 호주,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과 같은 범주에 속해 있다. 한국은 아베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아시아 전략외교의 전개 대상국 중 하나일 수 있다. 아베정권의 대한국 전략은 역사 문제를 관리하고,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나아가 동·남중국해 등의 지역에서 표출되고 있는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적 행보를 견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베정권이 역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안보협력관계 구축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대한국 전략의 기저에는 대중국 포위망 구축이라는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아베정권의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일 협력관계 구축 전략 역시 이러한 대중국 견제라는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아베정권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이나 핵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대북전략을 완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베정권은 양 현안에 있어 한국,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하면서 대북 제재 등 '압력' 전략에 동참하겠지만, 대중국 및 한국 관계 그리고 미일 동맹의 변화 양상에 따라서는 과거 경험이 있듯이 독자적인 대북 대화 및 유화 정책에 중점을 둔 전략을 전개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아베정권의 대외전략 및 대한, 대북전략을 앞에 두고 한국의 대일전략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의 통일외교 측면에서 몇 가지 밝히고자 한다.

첫째, 한국은 아베정권의 대외전략이 '군사대국화'를 통한 군국주의의 팽창이라는 과거 지향의 관점을 버려야 한다. 아베정권의 대외전략

은 단순히 아베 개인의 사상만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 북한 위협 증가, 빈번한 국제 테러리즘 등 동아시아 지역 질서 변동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 구도의 변화 속에서 일본이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차원에서 나온 대외전략이다. 이것을 단순히 일본이 과거 평화국가 이미지를 버리고 전쟁국가로 나아간다는 환상 속에서 해석한다면 한국의 정책적 실패를 가져올 뿐이다. 이제는 아베 정권의 대외전략 변화를 일본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살펴가면서 보다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성과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은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전제로 대일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베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 평화헌법 제21조 실시 등을 통한 실질적 개헌, 헌법 개정 절차 완화 시도 등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일본의 헌법 개정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성공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일본이 1990년대 탈냉전 이후 계속해서 추진해온 ‘보통국가화’가 아베정권에서 실질적으로 완성되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보통국가 일본이 ‘권력국가화’ 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한·미·일 협력의 틀 내에서 한일 관계 개선 및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미일동맹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한 전략 외교 전개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 특히 아베정권이 미일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관련해서 한국이 과거사 문제와 결부시켜서 무조건 반대 입장만 내세우기 보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의 상관성을 이해한 가운데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한 현재 아베정권의 미일동맹 강화 전략이 대중국 견제가

I
II
III
IV
V
VI

핵심 목표이므로 한미동맹과 중일 간 경쟁구도가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미일동맹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한 안보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 및 대한, 대북전략에서 언제나 ‘중국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아베정권의 대외전략은 급격히 부상하는 중국이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또한 한반도 정책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한국이나 북한에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는 항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언제나 중국 견제 및 ‘중국 요인’과 동아시아 질서 변동의 가능성에 염두를 둔 대일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한일 관계에서 가치관과 체제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2012년 말 아베정권 출범 이후 아베 수상역의 역사 수정주의에 따라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은 적이 있다. 게다가 한국의 대중국 접근을 ‘한국의 친중 정책’으로 이해한 일본은 미국에 대해 한국의 ‘중국경사론’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적도 있다. 또한 아베정권은 한국에 대한 정책 및 인지도 면에서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십으로 보는 경향도 강하다. 하지만 아베정권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중국의 부상 및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라 한국에 대해 전략적 파트너십으로서 한일 관계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일본을 자유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에 기반한 가치관과 체제를 공유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아베정권의 장기집권에 대비한 중기적인 대일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현재 자민당 당규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는 재선(최대 6년)까지 가능하지만, 아베정권의 높은 지지율과 리더십 대안 부재 속에

당규 개정을 통해 3선 연임까지 가능하게 해서 최장 2021년까지 수상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16년 7월 10일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아베정권은 2018년까지는 안정적 국정 운영 기반을 확보했다. 물론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아베 수상은 당분간 경제 부양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으로 주력할 것을 전망된다. 그리고 8월 3일 단행한 개각을 통해 새로운 아베 내각이 구성되었는데 외무상을 비롯한 주요직 인사가 유입되었고, 이나다 방위상과 같은 친아베 세력이 대거 유입되었다. 이들 인사들의 특징과 성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아베정권의 대외 정책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미일 관계, 한일 관계, 일중 관계, 북일 관계 등을 전망하여 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장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아베 수상이 2021년까지 집권이 가능할 경우를 상정해서 향후 아베정권의 대외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베정권의 정책 방향은 한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된 만큼 한일 관계는 정치뿐만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일곱째, 아베 이후, 즉 ‘포스트 아베’ 일본의 대외전략 및 대한, 대북 전략을 분석하고 예측해야 한다. 현재 아베 수상을 대체할 수 있는 자민당 혹은 야당인 민진당에서 확실한 리더십이 부재한 가운데 일본의 미래 리더십은 세 부류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 첫째, 아베의 자민당 총재 임기를 통한 정권 연장, 둘째, 아베와 안보 인식은 동일하나 역사 인식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시바 전 간사장의 집권, 셋째, 현 아베 내각의 외무상인 기시다의 집권이다. 현재 상황을 봐서는 아베 수상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2021년까지 자민당 총재 임기 연장을 통해 총리직을 계속해서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총재 임기 연장에 찬성하는 니카이 도시히로를 자민당

I
II
III
IV
V
VI

간사장으로 임명하면서 이미 아베 수상은 총리직 연장에 대한 의욕을 은연 중에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스트 아베를 놓고 자민당 내에서 이시바와 기시다는 세력 확장을 꾀하면서 포스트 아베를 준비하고 있다.

향후 일본에서 보통국가화 흐름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한다면 일본이 과거 통상국가에서 보통국가로, 그리고 보통국가에서 권력국가로 국가노선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상정하고, 한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이시바와 기시다 두 사람의 정치적 이념 및 대외 구상 등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이들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에 대한 생각을 하루빨리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편. 『2015 국제정세 전망』.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4.

김두승 외.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 동향』. 서울: KIDA Press, 2017년 출간 예정.

박철휘 역음.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 서울: 동아시아재단, 2014.

우에스기 다카시 지음. 남윤호·이승녕 옮김. 『아마추어 정부의 몰락』. 서울: 중앙북스, 2008.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3 동아시아 전략평가』.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3.

_____. 『2014 동아시아 전략평가』.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

_____. 『2015 동아시아 전략평가』.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内山融. 『小泉政権: パトスの首相』は何を変えたのか』. 東京: 中央公論新社, 2007.

安倍晋三. 『新しい国へ: 美しい国へ 完全版』. 東京: 文藝春秋, 2013.

外務省. 『外交青書<2014(平成26年版)>』. 東京: 日経印刷, 2014.

田崎史郎. 『安倍官邸の正体』. 東京: 講談社, 2014.

2. 논문

- 김두승. “신미일방위협력지침과 한국의 안보.” 이창형 외. 『2014~2015 한국의 안보와 국방』. 서울: KIDA Press, 2015.
- _____. “아베 정권의 대중정책과 한국: 견제와 타협의 이원적 접근전략.”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1집, 2016.
- 배정호. “일본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배정호 외. 『동북아 4국의 대외 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이기태. “일본의 미일동맹 강화 전략.” 박철희 역음. 『동아시아 세력 전이와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 서울: 동아시아재단, 2014.
- _____. “대일본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 김진하 외.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_____. “이시바 시게루(石破茂)의 대한국인식: 보수우파적 안보관과 보수리버럴적 역사관의 혼재.”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일본 파워엘리트의 대한정책』. 서울: 선인, 2016.
- 이명찬.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에 나타난 ‘네 가지 노선’: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의 이해를 위한 분석틀.” 『국제·지역연구』. 제16권 1호, 2007.
- 임은정. “아베 유신과 한반도: 제2기 아베 정권의 대전략과 대(對) 한반도 정책.”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일본 파워엘리트의 대한정책』. 서울: 선인, 2016.
- 전현준. “북·일관계, 순풍 기대할 수 있을까?.” 『통일한국』. 통권 367호, 2014.
- 최희식. “적대적 공존에서 상생적 공존으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제70호, 2015.

한익석. “탈자민당 정치와 변화의 리더십: 고이즈미 리더십 연구.” 손열
편. 『일본 부활의 리더십: 전후 일본의 위기와 재건축』.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3.

히라이 히사시. “아베 정부의 대북정책: 기회와 정체-시련에 직면한
'스톡홀름 합의'.” 『한반도 포커스』. 제31호, 2015 봄호.

Green, Michael. “Japan is back: Unbundling Abe’s Grand
Strategy.” *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
December 2013.

Kim, Doo-seung. “A Hurdle beyond History: Japan’s Changing
Perception of the DPRK Nuclear Threat and Its Impact
on Korea-Japan Relation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7, no. 4, December 2015.

Kim, Doo-seung and Ki-tae Lee. “Japan Going it Alone toward
a Normal Country.” *East Asian Strategic Review 2013*.
Seoul: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Strategy, 2013.

高橋杉雄. “日本——安全保障政策のアップグレード.” 防衛省防衛研究
所編. 『東アジア戦略概観2016』. 東京: アーバン・コネクション
ズ, 2016.

福田毅. “日米防衛協力における3つの転機: 1978年ガイドラインから
日米同盟の変革までの道程.” 『レファレンス』. 第56巻 7号,
2006.

石破茂. “安倍さんと日本を建て直す.” 『文芸春秋』. 2012年 11月号.
安倍晋三. “新しい国へ.” 『文芸春秋』. 2013年 1月号.

3. 기타 자료

『동아일보』.

『서울신문』.

『연합뉴스』.

『한국일보』.

『読売新聞』.

『琉球新報』.

『毎日新聞』.

『産経新聞』.

『時事通信』.

『朝日新聞』.

장혜진·김두승.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전망과 안보적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안보정세분석, 2014.5.20.).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KINU 통일나침반 16-05, 2016.8.).

Jimbo, Ken. “Power and Influence: New Dimension of Japan-Southeast Asia Security Relations,” 2014 Fall Seminars of Program on US-Japan Relations at Harvard University, November 24, 2014.

内閣官房. “わが国及び国際社会の平和及び安全の確保に資するための自衛隊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新旧対照表).”

- _____ . “国家の存立を全うし，国民を守るための切目のない安全保障法制の整備について.”
- 内閣官房・内閣府・外務省・防衛省. “平和安全法制の概要—わが国及び国際社会の平和及び安全のための切れ目のない体制の整備.”
- 内閣府. “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 2016.1.
- 防衛力の在り方検討のための委員会. “防衛力の在り方検討に関する中間報告.” 2013.7.26.
- 防衛省. “南シナ海における中国の活動.” 2015.5.29.
- _____ . “大臣臨時会見概要(差替え).” 2016.5.2.
- _____ . “日米防衛相会談の概要.” 2013.4.29.
- _____ . “中期防衛力整備計画(平成26年度～平成30年度)について.” 2013.12.17
- _____ . “平成26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2013.12.17
- 首相官邸. “20世紀を振り返り21世紀の世界秩序と日本の役割を構想するための有識者懇談会報告書.” 2015.8.6.
- _____ . “開かれた，海の恵み——日本外交の新たな5原則.” 2013.1.18.
- _____ .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 2013.12.17.
- _____ . “内閣総理大臣談話.” 2015.8.14.
- _____ . “内閣総理大臣声明.” 2013.2.12.
- _____ . “内閣総理大臣声明.” 2016.1.6.
- _____ . “臨時閣議案件：国の存立を全うし，国民を守るための切れ目のない安全保障法制の整備.” 2014.7.1.
- _____ . “安倍内閣総理大臣記者会見.” 2014.5.15.
- _____ . “安部内閣総理大臣就任記者会見.” 2012.12.26.
- _____ . “安全保障の法的基盤の再構築に関する懇談会報告書.” 2014.5.15.

外務省. “アジア・アフリカ会議 (バンドン会議) 60周年記念首脳会議
における安倍総理大臣スピーチ: Unity in diversity——共に
平和と繁栄を築く.” 2015.4.22.

_____. “わが外交の近況(1957).”

_____. “北朝鮮による弾道ミサイル発射への対応.” 2016.2.7.

_____. “北朝鮮による核実験及び弾道ミサイル発射に関する国連安保
理決議について.” 2016.3.3.

_____. “我が国独自の対北朝鮮措置について.” 2016.2.10.

_____. “岸田外務大臣会見記録.” 2014.5.30.

_____. “外務大臣会見記録.” 2012.12.18.

_____. “日・フィリピン首脳会談.” 2015.6.4.

_____. “日米共同ビジョン声明.” 2015.4.28.

_____. “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 2015.4.27.

_____. “日米首脳会談概要.” 2013.2.22.

_____. “日米安全保障協議委員会共同発表——より力強い同盟とより
大きな責任の共有に向けて.” 2013.10.13.

_____. “日中関係の改善に向けた話合い.” 2014.11.7.

_____. “日中首脳会談.” 2014.11.10.

_____. “日中首脳会談.” 2015.4.23.

自由民主党. “日本国憲法改正草案.” 2012.4.27.

_____. “自民党重点政策2012.”

統合幕僚監部. “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ガイドライン)及び平和安
全法制関連法案について.”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https://ja.wikipedia.org>>.

일본 공산당중앙위원회. <www.jcp.or.jp>.

일본 내각관방. <www.cas.go.jp>.

일본 방위성. <www.mod.go.jp>.

일본 수상관저. <www.kantei.go.jp>.

일본 외무성. <www.mofa.go.jp>.

일본 자유민주당. <www.jimin.jp>.

일본국 제183회 국회 참의원본회의록 제8호, 2013.2.28.

최근 발간자료 안내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4-01 제1차 KINU 통일포럼: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통일연구원
2014-02 제2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보유 및 대남정책	통일연구원
2014-03 제3차 KINU 통일포럼: 북일 스톡홀름 합의와 동북아정세	통일연구원
2014-04 제4차 KINU 통일포럼: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와 전략	통일연구원
2014-05 제5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통일연구원
2014-06 제6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통일연구원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2015-03 제9차 KINU 통일포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업그레이드 전략 - 8·25남북합의 평가와 박근혜정부 후반기 대북·통일정책 방향 -	통일연구원
2015-04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통일연구원
2015-05 제11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통일정세분석)

■ 통일정세분석 ■

2014-01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박형중 외
2014-02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결과 분석과 전망	박영자 외
2014-03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 통일나침반 ■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2015-02 최근 2년 간 미·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옥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2015-05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이애리아, 이창호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통일플러스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2016-01 KINU 통일 + Vol.2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6-02 KINU 통일 + Vol.2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6-03 KINU 통일 + Vol.2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i>	한동호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욱 외	19,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i>	도경욱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욱 외	18,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i>	도경욱 외	22,500원

연구보고서

2014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4-01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외	7,500원
20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박영자	7,500원
20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양문수	9,000원
2014-04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성기영 외	7,000원
2014-05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C/EU 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외	6,000원
2014-06 탈북청소년의 경제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조정아, 홍민, 이희영, 이항규, 조영주	14,000원
2014-07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한동호	6,000원
2014-08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이금순, 도경욱	8,000원
2014-09 신뢰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외	11,000원
2014-10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김규륜 외	10,500원
2014-11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영태, 홍우택 외	12,000원
2014-12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7,000원
2014-13 한반도에 있어서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김수암 외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 편저	8,000원
2014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 2014)	전병곤, 홍우택, 신종호 외	9,000원
2014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인권연구센터	11,000원
2014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외	9,500원
2014	2014년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김형기	9,500원
2014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2014-01)	배정호 외	15,500원
2014	China'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4-02)	Bae, Jung-Ho et al.	18,000원
2014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1)	Kyuryoon Kim et al.	19,000원
2014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2)	Kyuryoon Kim et al.	15,500원
2014	한반도 통일의 효과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4-3)	김규륜 외	4,500원
2014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종철, 허문영, 송영훈, 김갑식, 이상신, 조원빈	12,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1)	조정아 외	7,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2)	조정아 외	22,000원
2014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허문영 외	12,000원
2014	Law and Policy on Korean Unifica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	박종철 외	11,000원
2014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손기웅 외	17,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4-01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임강택, 권태진
---------	-------------------------------	----------

■ Study Series ■

2014-01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2014-05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2015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홍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교육과정·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에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전병곤 외	10,000원
2015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종렬 외	13,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	-------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2016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운 외	14,000원
---------	-------------------------	-------	---------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 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태환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식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욱 외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2016-21	2016년 통일에측시계	홍우택 외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2016-23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홍민 외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 정책연구시리즈 ■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	--------------------------------------	----------

■ Study Series ■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연례정세보고서

201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4~2015	6,000원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8,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1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2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2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3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1 (2016)	10,000원

기타

2014 북핵일지 1955~2014	조민, 김진하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